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서론

1. 연구목적

독일통일이라는 급속한 사회변혁은 동·서독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동독청소년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경쟁사회에서 생활을 꾸려가는 일에 익숙한 서독청소년들에 비해 새로운 사회구조와 제도를 배우고 이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큰 심리적 부담으로 인식되었으며, 새로운 정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혼란을 겪게 되었다. 특히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통일과 함께 새롭게 변화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정체성과 소속감을 확립해야 했던 것이다.

전환기의 동독청소년들이 이러한 과제와 문제들에 직면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그들은 정신적으로 ‘서독’에 동화되었는지, 아니면 과거의 동독에 더 강하게 연연하고 있는지, 통일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외국인 적대감과 폭력에의 수용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머지않아 통일을 맞이할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특히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동독청소년의 입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들의 정치적 참여도와 관심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통일을 맞이했던 것과는 달리, 1990년이래 동독청소년들에게는 극우파적인 사고, 국수주의, 외국인 적대감 및 폭력성향이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단지 양적으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강하게 침투하게 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반화 되면서, 모든 것이 서독것

4 동·서독 청소년의 통일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이 된 현실에 분노, 약하고 낮선것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는등 갖가지 통일의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로인해 동독청소년의 상당수가 통일로 인해 동·서독이 더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일자체를 아예 후회하는 사람도 적지 않음이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처럼 통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인들이 새로운 마음의 장벽을 두터이 쌓고, 심리적 골이 더욱 깊어지는 추세를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 연구는 국가간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있는 독일의 상황을 청소년들의 사고, 가치관, 행동양식등을 통해 재 조명해 봄으로써 통합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독일정부는 이러한 혼란상황의 극복을 위해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통일전후 동·서독 청소년의 행동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 통일사회 적응과정 등에 역점을 두고, 독일의 여러 청소년관련기관이 통일전후 몇 년간에 걸쳐 시행한 연구조사 사업의 설문자료를 토대로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특히 독일청소년연구소의 청소년정책부가 지난 6년동안에 걸쳐 16-29세 독일 청소년층과 젊은층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 연구조사사업을 집약하여 1995년 책으로 출판한 “Jugend und Demokratie in Deutschland” (독일 청소년과 민주주의)를 주 자료로하여 번역했는데, 이론에 근거한 학술적 논문이라기 보다는 독일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중 특히 동독청소년의 통일사회 적응문제에 초점을 두어 관련문제를 분석 정리하고, 독일정부는 이러한 문제상황의 극복을 위해 어떠한 청소년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제시한 연구보고서이다.

그 모양이나 과정은 독일과 다를것이나 우리도 유사한 상황을 체험하게 될 것이므로 통일시 나타나는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진지하게 숙고해 보는데 의미를 두었다.

설문자료는 주로 독일청소년연구소 (Deutsches Jugendinstitut), 라이프찌히 중앙청소년연구소 (Zentralinstitut für Jugendforschung Leipzig), 콘라드-아덴아우어 기금연구소 (Forschungsinstitut der Konrad-Adenauer Stiftung)의 설문결과를 이용했는데, 동일한 질문이라 해도 각 연구소마다 대상연령이나 범위를 달리 할 경우 상이한 결과도 출되어, 좀더 대표성을 갖을 수 있는 자료를 인용했다. 또한 1994년 혹은 1995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대부분 1992년까지 실시된 것으로 수록되어 최근의 변화상황을 추측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갖고 있으나, 통일직후의 정치·사회적 변화상황에 대한 동·서독 청소년의 입장을 알아보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을 비롯하여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을 기술한 제 I장의 서론이외에 통일독일의 청소년, 통일독일의 청소년육성, 요약 및 결론의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 II장에서는 통독상황의 청소년을 주로 다루었는데, 통일을 전후로 하여 동독청소년의 의식구조는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쳤는지, 통일후 생활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동·서독 청소년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동독청소년의 국가관의 변화와 동·서독교류가 독일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독일의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특히 독일 민족주의와 국가정체성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국가우월주의 혹은 국수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국수주의적 입장에 대해 동·서독 청소년은 어떠한 차별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제 III장에서는 독일 통일정부의 청소년육성을 주제로하여 독일정부는 통일후 청소년관련 문제상황의 극복을 위해 어떠한 청소년정책을

6 동·서독 청소년의 통일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동·서 지역간의 사회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수행한 동독지역 특별지원정책, 연방 청소년계획에 근거한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 및 이를 위한 정부예산등을 알아보고, 특히 격동기의 동독청소년들이 되도록 빨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기위한 정부의 동독지역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사회사업에의 지원방침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외에 독일 청소년사업의 일환으로 여자청소년과 젊은여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청소년부가 수행한 여자청소년사업, 취업에 입문하는데 있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의 청소년을 위한 취업관련 청소년후원사업 및 독일의 청소년사업 관련 시설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IV장에서는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그 모양이나 과정은 독일과 다를 것이나 우리도 유사한 상황을 체험하게 될 것이므로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을 촉진시킬수 있는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II. 통일독일의 청소년

1. 동독청소년의 의식변화와 독일통일
2. 독일통일과 청소년 생활조건의 변화
3. 동·서독 교류와 독일통일
4. 동독청소년의 국가관과 독일통일

통일독일의 청소년

1. 동독청소년의 의식변화와 독일통일

1) 독일통일에 대한 동독청소년의 입장

독일국가의 통일은 1990년 10월 3일 처음 시작된것이 아니라 벌써 그 이전에 동독국민들의 의식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동독사회주의의 붕괴과정은 정치체제의 정당성 상실과 동독시민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근거를 둔다. 동독국가와 사회주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확신감의 결여는 벌써 70년대 중반부터 표출되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동독시민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서독국가에 기울어졌다 (Lemke, 1991:21-23).

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1979년 당시 단지 30%정도가 서독과의 연관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10년후 1989년에는 그 수치가 50%이상으로 바뀌었다 (Lemke, 1991:127-8). 그러나 동독시민들이 서독에 눈뜨기 시작한 주된 요인은 서독의 높은 정치적, 민주적 참여의 가능성보다는 그곳에 내재하고 있는 개인적인 자유와 소비성향, 즉 동독시민의 가치관의 변화로 볼 수 있겠다.

특히 동독청소년의 가치관의 변화를 시대적 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89년 전환기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 보면, 당시 동독은 공산정권하에 있었으므로 독일통일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금기였다. 그러나 당시의 몇몇 연구조사는 동독의 공산체제를 유지하려는 공식적인 선전이나 교육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청소년들에게 더이상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1985년에서 1987년 사이

10 동·서독 청소년의 통일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동·서독 통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거라 확신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표 II - 1> 동·서독 통합전 통일에 대한 동독청소년의 입장

“동독 사회주의와 서독 자본주의의 통일은 있을 수 없다.”

(단위: %)

	매우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전혀 그렇지 않다
1985	53	27	20
1987	41	28	31

자료 : Friedrich 외, 1994:120

1987년 단지 과반수도 안되는 청소년이 통일의 비 현실성에 동의했고, 대다수가 그명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적 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의 비현실성에 동의하는 청소년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1980년대에는 베르린 장벽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장벽이 무너지기 6개월전인 1989년 5월에는 단지 3분의 1 가량의 청소년만이 베르린 장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표 II - 2> 장벽의 필요성에 관한 동독청소년의 입장 (1989. 5.)

“베르린 장벽은 아직 필요하다”

(단위: %)

	매우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전혀 그렇지 않다
젊은층 근로자	38	27	35
실습생	34	35	31
학생 (9./10.학년)	25	29	46

자료 : Friedrich 외, 1994:120

이처럼 동·서독 통합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동독청소년들은 사회적인 변화, 즉 안정된 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개개인의 자유를 추구했는데, 이러한 갈망은 1989년 11월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도표 II - 3 에서 알수있듯이 통일에 대한 개인적 입장의 급속한 변화는 1989년 11월과 1990년 2월에 잘 나타나 있다.

통합직후인 1989년 11월만 해도 독일통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찬성하는 동독청소년은 과반수도 안 되었다 (표 II - 3 참조). 그러나 1989년 11월 이후 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젊은층이건 노년층이건 상관없이 통일을 통해 보다 빨리 경제적 안정과 자유로운 생활을 획득하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동시에 동독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의식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의 혼란이 뒤따른다: 1990년 여름 독일청소년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동독청소년이 독일의 통합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했고, 단지 25%가 독일통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반면 서독에서는 20%정도만이 독일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30%이상이 통일이 개인생활에 부정적영향을 미칠것이라 응답했다 (Schubarth, 1992: 67-69).

<표 II - 3> 동·서독 통합에 대한 15-24세 동독청소년의 입장
 “통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단위: %)

	1 매우찬성	2 찬 성	(1+2)	3 반 대	4 매우반대
1989. 11.	14	31	(45)	28	27
1990. 2.	39	39	(78)	16	6
1990. 3.	38	41	(79)	14	7
1990. 4.	43	35	(78)	17	5
1990. 6.	43	38	(81)	17	2
1990. 8.	42	40	(82)	16	2
1990. 9.	39	43	(82)	14	4

자료 : Friedrich 외, 1994: 124

2) 통일후의 미래에 대한 동독청소년의 입장

1990년 여름 동독청소년들은 당시 그들이 향유하고 있던 여성 평등권 이라든가 교육의 기회균등, 국가적으로 보장된 의료보험 및 노동에의 권리등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정치적 자유와 개인생활의 자유에 매력을 느꼈다(Hoffmann-Lange, 1992: 94).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자유와 소비에 대한 욕구의 충족은 곧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 대치되었는데,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 여름이후 일자리에 대한 그들의 낙관적 예측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표 II - 4 참조). 이 시점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청소년에게 뿐만 아니라 동독시민 전체로 확산되었고, 일부시

민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무기력함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장래의 학교나 직업과 관련된 불안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통일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하지는 않았으며, 근본적으로는 독일통일을 지지하고 있었다.

<표 II - 4> 동독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미래의 예측

(단위: %)

	낙관적(인 편)	
	19-25세	동독전체
1990. 4.	65.5	67.1
1990. 8.	46.0	46.3
1990. 9.	52.5	47.5

자료 : Bütow, 1995: 90

응답문항: 1=낙관적, 2=낙관적인 편, 3=부정적인 편, 4=부정적

응답중 낙관적(인 편): 1과2의 합계

동서 통합후 양 국가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동독청소년들의 의견이 위의 사실을 입증해 주는데, 통일직후 대다수의 청소년이 양국가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었다. 동독청소년의 88%가 양 국가는 “올바른 모습을 갖춘 사회공동체를 형성”해 갈것이라는데 동의했고, 15-24세 까지의 청소년중 단지 12%만이 당시의 동·서독 공동성장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표 II - 5 참조). 이 자료는 통일이후 1년이 안된 시기의 동·서독 통합과정의 상황을 나타낸 것인데, 1년 남짓후만 해도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1992년 초에 실시한 연구결과를 보면 통일에 대한 양립적 견해가 늘어나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 겪고있던 통합과정의 문제점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할수있는데, 특히 양국 생활수준의 균형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4 동·서독 청소년의 통일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표 II - 5> 동·서독의 공동성장에 대한 견해

“동·서독 국가는 40년 동안 분단되었다. 양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단위: %)

	확실히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5-24세	30	58	11	1
남 자	44	48	7	1
여 자	17	66	16	1
25-44세	34	56	9	1
45-64세	38	55	7	-
65세이상	47	47	5	1

자료 : Friedrich 외, 1994: 126

이러한 통일에 대한 입장과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사이에는 벌써 통일이전부터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추측할수 있다.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청소년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했으며, 통일조국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자유를 추구하는등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 1991년 여름에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는 이 상관관계를 잘 제시하고 있다 (표 II - 6). 또한 국가관이 투철한 동독 청소년일수록 통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으며, 국가관이 흔들리는 청소년인 경우 통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 - 6> 통일과 그후의 미래에 대한 동독청소년의 입장

통일에 대한 입장	미 래 상	
	확신하는 편(%)	걱정하는 편(%)
통일이 되어 기쁘다		
매우 그렇다/그렇다	75	23
그저 그렇다	64	34
거의/전혀 그렇지 않다	46	53
미 래 상		
통일에 대한 입장 : “통일이 되어 기쁘다” (%)		
	매우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전혀 그렇지 않다	
확신하는 편	65	31
걱정하는 편	46	40

자료: Friedrich 외, 1994: 129

2. 독일통일과 청소년 생활조건 변화

1) 독일통일이 동·서독 청소년의 생활에 미친 영향

독일이 통일된 2년후 독일청소년연구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이 그들의 개인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응답은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간에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데, 대부분의 동독청소년들이 통일로 인해 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는 반면 많은 서독청소년들은 통일이 개인생활에 부정적 영향 혹은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응답했다(표Ⅱ-7 참조). 한편 동독청소년들이 생활의 변화를 절실히 실감하고 있음은 그들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는데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Ⅱ-7> 통일후의 영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통일의 장·단점을 여러분의 개인생활에 비추어 생각할때 장점이 더 많은지 혹은 단점이 더 많은지 표시해 주십시오“

(단위: %)

	서독인	동독인
장점이 더 많은편	13.1	44.9
단점이 더 많은편	27.0	19.4
장·단점이 있음	12.7	31.4
변화없음/모르겠음	47.2	4.3
n	4,511	2,552

자료 : Bütow, 1995: 91

이같은 서독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통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부담이 동독청소년들에 비해 크기 때문인데, 그들은 통일에 대해 감정적으로 어느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생각한다. 그들의 가치관, 추구하는 이상 및 국제적 경험은 자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동독으로부터는 어떠한 자극도 없었다. “독일내의 두 국가”라는 형식은 그들의 정치적 사회화의 전제조건이었고, 그들은 또한 이 전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통일독일은 중요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목적이거나, 혹은 역사

적 유산으로 받아들여 질 수가 없는 것이다. 통일의 역사적, 정치·윤리적 차원은 서독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단지 성가신것으로 인식되어졌다 (Veen 외, 1994: 75).

반면 동독의 경우는 달랐다. 통일과 함께 동독청소년들은 자유, 시민권, 소비가능성을 획득했는데, 다시말해 그들은 공산정권의 계급주의 도구로 부터 해방된 것이다. 이는 국가와 경제에 남아있는 오랜인습에 대한 영향을 그들이 염려하고 있음을 보면 잘 알수있다 (표 II - 8 참조).

동독의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만, 한편 부정적인 변화도 내포하고 있다. 여행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개인 능력발휘의 자유 및 소비의 자유 등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었고, 부정적으로는 새롭게 경험하는 실업, 폭력및 범죄문제와 자발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통일사회가 겪고있는 경제·사회적 동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동독청소년들은 서독청소년과는 달리 통일의 부정적인 변화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

<표 II - 8> 독일통일에 대한 동·서독청소년의 견해

(단위: %)

	매우 그렇다/그렇다			그저그렇다			거의,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서독	동독	전체	서독	동독	전체	서독	동독
나는 통일이 되어 기쁘다	48	45	58	38	39	34	14	15	7
독일이 빨리 성장 하도록 무언가 하고싶다	34	29	56	39	40	33	26	30	10
통일에 대한 관심 이 없다	16	15	20	28	29	23	55	55	56
통일이 경제에 미 칠 영향이 염려된다	33	34	27	63	35	40	30	30	33
동독의 사회당이 아 직 국가적으로 중요 한 위치에 있는 것 이 두렵다	57	54	66	23	25	19	19	20	15
동독의 지도자들이 아직 영향력을 가지 고 있는 것이 염려 스럽다	47	45	53	25	26	20	27	27	27

자료 : Veen 외, 1994: 74

2) 통일의 긍정적 · 부정적인 영향

각 개인이 느끼는 생활의 변화에 대한 설문응답을 보면, 많은 동독청소년들은 그들 개개인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었고, 경제적 상황도 나아졌다고 응답했으나, 장래의 직업이나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있다. 반면 서독청소년은 통일로 인해 각 개인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와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표 II-9 참조). 물론 이결과로부터 각 요인이 실제로 악화된 것인지, 혹은 서독의 사회복지적 측면이 통일후 동독에 나눠져야 하는데 대한 불안감의 표시인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정치적 자유와 참여권에 대해서는 대다수(90%이상)의 서독 청소년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반면, 많은 동독청소년들은 통일후 이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보고있다.

<표 II-9> 생활조건의 변화에 대한 동·서독 청소년의 주관적 견해
(단위: %)

분 야	서독			동독		
	더 좋아짐	변화없음	더 악화됨	더 좋아짐	변화없음	더 악화됨
생활환경	8.4	86.0	5.6	72.4	18.5	9.1
경제상황	6.2	67.7	26.1	42.4	27.4	30.1
정치적 영향력	3.6	91.0	5.4	47.5	44.7	7.9
권리/자유	3.4	92.6	4.1	69.4	26.3	4.3
안정된 직업	5.0	74.1	20.9	13.0	21.6	65.4
사회적 안정	3.4	72.6	24.0	16.0	25.8	58.2

자료 : Bütow, 1995: 91

통일이 갖는 긍정적 의미의 측면에서도 동·서독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있다. 아래의 설문결과에서 알수있듯이 동독청소년들은 통일의 의미를 여행의 자유 및 자기개발을 위한 제반조건의 향상, 소비가능성에 둔 반면, 이미 자유시민사회에서 성장한 서독의 청소년들은 독일통일의 의미가 자아실현을 위한 가능성의 향상에 있는것이 아니라 여행이나 폭넓은 교류기회의 제공에 있는것이다.

통일의 부정적영향에도 동서독청소년들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있다. 서독청소년들이 특히 “통일에 드는 비용”에 부담을 갖는 반면, 동독의 청소년들은 직업과 사회적안정의 상실을 표명했다. 특히 능률과 경쟁의 압박으로부터 오는 냉소적인 인간관계가 자주 거론되었다.

<표 II - 10> 통일의 장점에 대한 동·서독청소년의 견해

	서독		동독	
	n	%	n	%
여행의 자유	547	38.1	1144	24.0
교우관계의 확장	169	11.8	29	0.6
친지방문	120	8.4	31	0.7
전반적 통합	95	6.6	8	0.2
자유민주주의	64	4.5	813	17.1
새로운 교육 및 직업의 가능성	66	4.6	379	8.0
자아개발	45	3.1	393	8.2
상호간의 배움	37	2.6	3	0.1
수입/경제사정	24	1.7	310	6.5
경제적 측면	21	1.5	116	2.4
여가/대중매체	15	1.0	353	7.4
소비가능성	8	0.6	773	16.2
생활수준	15	1.0	261	5.5
안정된 직업	12	0.8	9	0.2
사회적 안정	4	0.3	15	0.3
동·서독 대한 긍정적사고	2	0.2	1	0.0
민주적 협력	1	0.1	48	1.0
사회시장경제	-	-	9	0.2
기타	189	13.2	70	1.5
n	1434	100.0	4765	100.0

자료 : Bütow, 1995: 94

<표 II - 11> 통일의 단점에 대한 동·서독청소년의 견해

	서독		동독	
	n	%	n	%
세금	976	33.1	185	5.0
소비성향	364	12.3	254	6.9
수입/경제사정	264	8.9	221	6.0
교육 및 직업의 가능성	199	6.7	807	21.8
생활수준	197	6.7	93	2.5
상호 부정적 시각	113	3.8	60	1.6
급진주의/급우파	113	3.8	68	1.8
사회적 불안	108	3.7	462	12.5
직업의 불확실성	75	2.5	360	9.7
자유민주주의	41	1.4	46	1.2
경쟁심	42	1.4	443	12.0
경제적 측면	38	1.3	23	0.6
사회복지 비용	23	0.8	37	1.0
외국인의 이주	23	0.8	54	1.5
통일반대자	12	0.4	13	0.4
폭력 및 범죄	7	0.2	43	1.2
가치관의 상실	5	0.2	58	1.6
여가	3	0.1	31	0.8
민주적 협력	2	0.1	6	0.2
정치적 대안의 상실	2	0.1	24	0.6
현대적 감각에 대한 모험심	-	-	23	0.6
사회시장경제	-	-	4	0.1
기타	343	11.6	379	10.3
n	2950	100.0	3694	100.0

자료 : Bülow, 1995: 96

3) 통일후 생활조건의 변화에 따른 만족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독청소년들은 통일후 그들의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표 II - 7 과 9)과는 달리, 서독청소년들에 비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서독 청소년의 과반수 가량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동독의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생활만족도는 30%남짓에 불과했다 (표 II - 12 참조).

한편 동독청소년의 40%이상이 통일후 그들 개인의 경제사정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표 II - 9 참조). 연구조사에 따르면 통일후 실제로 동독인의 수입이 상승되었고, 동·서독이 이 부분에 있어 상당히 근접해가고 있다고 한다 (EMMAG 1993:136, Kuhnke 1994:34, ISI 199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동독청소년의 30%이상이 그들의 경제사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통일후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다는 동·서독의 경제적 불균등에 대한 불만이라고 해석할수 있겠다.

또한 동독 청소년에게서는 직업과 사회보장에 대한 높은 불만족도가 나타났는데, 이는 동·서독 청소년들의 객관적인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설문에 응한 동독청소년의 50%가량이 그들의 직업적 안정면에 불만족하는 반면, 서독청소년은 단지 20%정도가 불만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선 동독 청소년의 거의 3분의1 가량이, 서독청소년의 4분의 1이상이 불만족하는걸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불만족도는 아마 독일통일과 상관이 있는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때문일 것이다.

<표 II - 12> 생활영역별 만족도

(단위: %)

만족도	서독			동독		
	불만족	만족	중간치	불만족	만족	중간치 ¹⁾
일반적인 생활만족도	8.4	48.7	7.0	13.0	31.1	6.3
생활환경	9.4	44.1	6.8	10.7	41.3	6.7
경제상황	24.0	23.7	5.5	31.7	18.7	4.9
정치적 영향력	26.8	16.7	5.0	29.6	15.2	4.9
권리/자유	13.4	29.2	6.1	14.6	31.6	6.1
의사소통	14.8	28.8	6.0	20.4	25.3	5.6
안정된 직업	18.0	31.1	5.9	45.5	16.8	4.1
사회보장	15.0	35.7	6.2	43.2	18.0	4.3

자료 : Bülow, 1995: 99

1) 응답결과를 간략히 하기위해 11단계(0-11)로 나누었다. 도표에서는 “불만족”(0-3단계)과 “만족”(8-10단계) 및 중간치로 측정해 나타냈다. 백분율은 이 수치에서 얻어낸 것이다.

3. 동·서독 교류와 독일통일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쉽게 변화할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자유와 개인생활의 자유를 청소년들이 열망했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이 이렇듯 정치적, 개인적 자유를 추구했던 요인은, 분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달리 끊임없이 지속되온 동·서독간의 교류 때문이 아니었나 짐작해 볼 수 있다.

70년대와 80년대 동서독 시민들은 각기 다른지역의 친지와 서신교환 및 방문등 교류를 갖고 있었다. 독일 청소년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독시민의 60%이상 이 서독에 친지를 두고있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24 동·서독 청소년의 통일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독의 친지와 서신연락 및 방문등 개인적인 접촉을 하고있었다.

<표 II - 13> 동독청소년의 서독 친척/친지와의 접촉 (1983:N=3,200)

“서독 및 서베르린에 친인척이 있습니까?”

(단위: %)

	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방문함	네, 그런데 편지 연락만 취함	네, 그러나 접촉이 없음	없다
친척	25	13	18	44
친지	12	13	9	66
친척이나 친지	30	17	20	33

자료 : Friedrich 외, 1994: 121

이러한 개인적 교류이외에도 라디오나 TV방송을 통해 서독사회와 항상 접촉할수 있었다. 동독에서는 서독방송을 금지하거나 동독 사회당을 선전하거나 하는등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서독의 방송망을 통해 여러가지 정치적 정보가 동독에 유입되었다.

1987년부터 1988년까지의 연구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 기간동안 라이프찌히 청소년연구소는 8-10학년 까지의 청소년 1,200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중매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 II - 14> 동독청소년의 정치적 정보획득 수단으로서의 서독방송 이용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 여러분은 다음의
 방송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단위 %)

	거의 매일 이 용	일주일에 여러번 이용	일주일에 한번이용	거의 이용 하지 않음	전혀 이용 하지 않음
동독의 라디오방송					
8학년(1987)	10	30	17	30	13
9학년(1988)	8	25	15	32	20
10학년(1989.5.)	8	21	14	34	23
서독의 라디오방송이나 TV					
9학년	49	32	7	9	3
10학년	54	34	4	7	1

자료 : Friedrich 외, 1994: 121

실제적으로 동독의 청소년층 대중매체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동독방송보다는 서독방송을 선호했다. 또한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 대중매체의 이용은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태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데, 조사대상자중 통일전 정치적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써 서독방송을 심도 있게 이용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일후 통일독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자주 자신을 동독시민이 아닌 연방독일시민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더 강하게 독일시민으로써의 자존심을 갖고 있었다.

즉 통일전 서독의 생활수준이나 개인적 자유의 장점을 대중매체를 통해 깊이 경험한 동독 청소년들은 통일을 동경하며 서독의 질적인 생활환경을 염원했었다고 짐작할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독방송의 동독전파가 동독시민의 정치적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체제전환을 한층 부추였던 것이다.

4. 동독청소년의 국가관과 독일통일

1) 독일 국가정체성의 역사적 배경

1993년 여름, TV의 청소년프로그램에서 동·서독 시민통합에 대한 주제를 놓고 시청자 질문을 한 결과, 시청자의 4분의 3정도가 “장벽을 다시 쌓자!” 라는 논제에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청소년은 이제 더 이상 통일된 국가를 원하지 않는지, 장벽을 다시 쌓자는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상태에서 통일독일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에서 투철한 국가관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아주 특별한 현상이다. 수많은 변화를 경험한 독일의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독일사람들에겐 오랜기간 이어져온 국가정체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독일이라는 국가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많은 소 국가가 모여 뒤 늦게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시민적인 진보사상에 의해 국가를 형성하기에 앞서 다른 유럽국가, 특히 나폴레옹의 정치적 지배권을 지닌 프랑스나 월동한 경제력을 지닌 영국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경계를 긋는 것이 우선 목적이었다. 즉 국가형성이 자유에 근거한 시민운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스마르크 제국의 설립을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정의하는 근본요소도 정치적·시민해방론적 입장이 아닌 언어, 문화, 혈통과 같은 것을 우위에 두었다 (Westle 1995:196).

제 1차 세계대전 후 독일 민족주의는 급격화된다. 이는 독일의 패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추궁에 기인하는데, 전쟁에 대한 좌절감과 죄책감을 자국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상하려 했다. 그 당시 민족사회주의 이념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상처받은 국가적 자존심과 자국의 사회적위치의 하락에 대한 두려움에 대처할수 있는 것은 오직

민족주의 이념이었던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의 패배와 연합국에 의한 독일국가의 분단은 독일의 국가정체성을 또다시 손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국가의 통일은 독일역사의 분열을 종식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또다른 분열을 의미할수도 있다. 통일을 통해 40년간 분단되었던 국가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이것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즉 서독 민주주의 체제로의 병합이었던 것이다.

독일민족주의에 대한 자부심의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립된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중매체를 통한 혹은 학문적 논쟁에서 독일 민족주의는 내적으로 잠재된 병적인 것이거나 혹은 위험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었거나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등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심리적으로 결핍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민족주의의 이념을 통해 지나치게 주체적이고 왜곡되게 행동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우월주의는 대부분 다른 국가를 격하시키는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국민들에겐 그들의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국가감정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Imhof 1993, 재인용). 이와는 반대로 국가에 대한 자존심의 결여는 열등감과 병적인 자기학대의 표시라 하여 독일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 (Rose 1985, Noelle-Neumann 1987, 재인용). 정치적으로 볼 때 투철한 국가정신은 긍정적이고, 갈등을 와해시키며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를 가질수 있다. 민주사회에서의 내적갈등이나 국가가 경제적위기에 처했을 때, 투철한 국가공동체 의식은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수 있는데, 정치자 간의 내적갈등에 부딪혀서도 쉽게 합의점을 찾을수 있고, 정치체제가 원활하게 기능을 다 하지 못 하는 시점에서 도 인내하여 쉽게 위기를 극복할수 있다는 것이다. 투철한 국가관은 또한 군사적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Piel 1985, Herdegen 1987, 재인용).

2) 통일전후 동독청소년의 국가관 변화

동독의 젊은청소년들은 그들 자신을 항상 독일인으로 인지했다. 그러나 독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혹은 독일은 어떠한 국가여야 하는지등 내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채, 동독 공산당의 선전에 강한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통일이 되기 전 동독청소년들은 자신은 항상 동독시민이라 생각했고, 그들의 국가관은 곧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것과 동일했다. 단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확고하게, 그리고 아주 의식적으로 국내이주란 형태를 빌어 공식적인 정치적 전형에서 벗어나려 했는데, 이것은 곧 동독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이다.

별써 통일이 되기 몇년전부터 동독청소년들에겐 국가관 갈등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통일후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많은 젊은층 시민들은 동독이 사회주의의 국가였다는 것보다 단지 자신들의 고향이라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두는것 같다.

<표 II - 15> 동독청소년의 국가관

“나는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 있음을 느낀다”

(단위: %)

	매우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전혀 그렇지 않다
실습생			
1983	46	45	9
1985	51	43	6
1986	48	46	6
1988(5월)	28	61	11
1988(10월)	18	54	28
젊은층 노동자			
1983	55	38	7
1985	57	39	4
1986	46	49	5
1988(5월)	32	61	7
1988(10월)	19	58	23

자료 : Friedrich 외, 1994: 143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동독시민의 국가관 상실은 1989년에도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동독 공산당에 대한 강한 회의에서 초래된 것이다.

그러나 동·서통합이라는 대전환이 있은후 잠깐동안 동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된 동독에 대해 민주적인 개혁, 민주적 행위, 즉 새로운 진로에 대한 정치적 환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독에 대한 애국심을 잠시나마 다시한번 발휘하고자 하는, 공산정권의 체제전복을 실행한 승리자의 잠재적 역량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15-25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독일청소년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이러한 현상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표 II - 16> 통일후 동독청소년들의 국가관
“나는 동독시민임을 느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전혀 그렇지 않다
1989. 11	71%	22%	7%
1990. 2	47%	29%	24%
1990. 4	52%	31%	17%
1990. 6	41%	35%	24%
1990. 8	47%	34%	19%
1990. 9	41%	31%	28%

자료 : Friedrich 외, 1994: 144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났던 동독과의 연관성은 1990년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독일과 동독에 대한 대립적인 사고, 역시 청소년의 의식에서 멀어져갔다. 시민들은 독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 성장하여 그곳에서 생활경험과 가치관을 형성한 동독인으로 인식했다. 이것은 다음의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다.

<표 II - 17> 동독청소년들의 통일독일에 대한 인식
“나는 독일시민임을 느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전혀 그렇지 않다
1989. 11	69%	26%	5%
1990. 2	75%	22%	3%
1990. 4	59%	32%	9%
1990. 6	63%	29%	8%
1990. 8	56%	30%	14%
1990. 9	48%	44%	8%
1991. 6	53%	34%	13%

자료 : Friedrich 외, 1994: 144

1990년 6월 동독청소년의 60%이상이 전혀 거리낌 없이 자신을 독일인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높은 국가와의 동일시 정도는 새로이 획득한 자신의 위치와 생활의 기회를 확고히 하려는 의지에서 생겨나며, 또한 수많은 불확실성의 경험, 익숙했던 생활환경의 상실 및 근대화 과정의 마찰등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독일과 동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지금까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또한 현재까지도 많은 동독의 청소년들은 자신을 독일인일뿐만 아니라 옛 동독시민으로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양면성은 옛 정치체제에 대한 그리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향에 대한 향수 혹은 각자의 개별적인 삶의 세계에 대한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3) 국수주의와 외국인 적대감정

일반적으로 독일의 국가우월주의와 국수주의,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독일 청소년의 과반수 정도가 독일 국가에 대한 자존심과 동·서독 전체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해도 독일이 다른국가에 비해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국수주의로 정의되어 질수 있는 다섯가지의 명제에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는 청소년은 단지 8분의 1에 불과해 국가우월주의를 과장해서 국수주의로 동일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엔 동·서독청소년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표 II - 18 참조). 양 국가 모두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국가사회주의에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옛 동독지역에 대한 반환 및 독일의 인종적, 문화적인 우월성에 대한 의견엔 소수의 청소년이 긍정하고 있다. 단지 독일이 유럽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주장에 가장 많이 긍정하고 가장적게 부정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어떤 전형적인 국수주의에 입각한 반응이 아니라, 독일이 그 국가적 크기나 인구수, 혹은 통일로 인해 다시 얻은 주권등 국제적인 맥락에서 볼 때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여론으로부터 취한 입장이라 해석 할 수 있겠다.

<표 II - 18> 동·서독청소년의 국수주의적 입장에 대한 견해
(단위: %)

	서 강한긍정	독 강한부정	중간치	동 강한긍정	독 강한부정	중간치
1) 독일의 증추적 역할	19.8	46.5	2.9	21.5	47.6	2.9
2) 동독지역의 반환	12.9	61.6	2.4	12.5	66.1	2.2
3) 독일, 독일인의 우월성	10.3	65.8	2.2	8.2	69.1	2.1
4) 독일문화에 대한 자부심	14.0	55.0	2.5	15.3	54.3	2.6
5) 독일의 민족사회주의	8.1	72.8	1.9	10.6	75.0	2.0
총 계	12.7	52.1	2.4	12.3	51.7	2.2

자료: 독일청소년연구소, 1992

응답형식은 6(매우동의)으로부터 1(전혀 동의안함)까지 6단계.

강한긍정(국수주의적)은 개별항목 5와 6, 지수표시에선 4.01~6.00이고, 강한부정(반 국수주의적)은 개별항목 1과2, 지수표시에선 1.00~2.01이다.

중간치는 1(반 국수주의적)~6(국수주의적)까지로 표시한다.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 1) "독일정치는 독일이 유럽에서 증추적인 역할을 맡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해야한다."
- 2) "독일은 동독지역의 분리된 통제선 존재할수 없다"
- 3) "독일인은 그 인종적 측면에서 다른민족에 비해 우수하다"
- 4) "독일문화는 다문화의 모범이 된다"
- 5) "독일의 민족사회주의는 빛나가긴 했지만 원래 하나의 이상적인 이념이었다."

동독청소년들의 외국인 적대감정의 정도는 서독보다 훨씬 높으며, 반대로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외국인의 법적인 권한에 대한 질문에는 예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지역 선거권에 대한 의견에서 서독인들은 동독에 비해 더 강한 회의를 표명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외국인적대감은 인종적인 우월감에서 연유한것 이라기보다는 상황적인 것이거나 혹은 새로이 형성된 것이라는게 각 명제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에서 입증된다. 예를들어 독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은 독일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설득력이 없는데 반해, 일자리에 대한 독일인과 외국인의 경쟁에 대해 논의되어지면 외국

인 추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가속화된다. 이것은 동서독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동독의 경우가 외국인에 대해 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며 통일로 인해 악화된 일자리 문제에 더 날카롭게 반응한다 (표 II - 19 참조).

<표 II - 19> 외국인에 대한 동·서독청소년의 입장

(단위: %)

	서			동		
	적대적	우호적	중간치	적대적	우호적	중간치
1) 일자리	26.1	45.6	3.1	41.3	26.7	3.9
2) 법적인 권리	42.1	22.4	3.9	40.3	22.1	3.9
3) 문화적인 이득	27.1	32.9	3.4	39.2	22.1	3.8
4) 독일추방	14.1	62.9	2.4	21.0	49.6	2.9
총 계	24.4	24.5	3.2	37.4	17.4	3.6

자료: 독일청소년연구소, 1992

외국인 적대적 및 외국인 우호적은 측정치 5와 6 및 1과 2.

지수는 외국인 우호적은 1,00~2,01이고 외국인 적대적은 4,01~6,00임.

중간치는 1(외국인 우호적)에서 6(외국인 적대적)으로 표시함.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 1)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경우 외국인은 그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 2) "외국인도 모든분야에 있어 독일인과 같은 권리를 갖어야 한다"
- 3) "나는 외국인이 우리문화를 풍요롭게 하기때문에 외국인의 독일체류에 동의한다"
- 4) "외국인이 독일을 떠나는 것이 최선책이다"

국수주의와 외국인적대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국수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경우 외국인에 대해 거리감을 두려는 반면, 외국인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 꼭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Westle, 1995:227). 그러나 조직적인 운동으로 국수주의적이고 외국인 적대적인 행동양식을 표현하려는 청소년은 아주 극소수이다

(표 II - 20 참조). 독일청소년연구소는 여러 가지 정치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과 그 참여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극우단체’라 할 수 있는 국수주의 단체, 파쇼 및 스킨과 ‘반 인습단체’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단체, 제3세계 활동 및 평화운동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비교해 볼 때, 동서독 청소년 모두 ‘극우단체’보다 ‘반 인습단체’의 활동에 더 많은 공감대를 하고 있었다. 지수율로 나타내서 1을 가장 큰 공감대로 5를 가장 낮은 공감대로 표시했을 때, ‘반 인습단체’의 공감대는 동서독 모두 3.2로, ‘극우단체’에의 공감대는 서독에선 4.9, 동독에선 4.8로 나타나 극우적인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상반된 두 단체에 대한 공감도의 차이는 그 실제적 활동을 고려할 때 더 뚜렷이 나타난다. 동서독을 막론하고 이 두단체에 가입하여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극소수이다. 그러나 ‘반 인습단체’에 관심을 갖고, 가끔 모임에 참석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에 동참하는 청소년은 ‘극우단체’의 활동에 동참하는 청소년보다 훨씬 많다. 또한 실제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지만, ‘반 인습단체’에 공감하고 있는 청소년이 8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표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동독에서의 비교적 높은 ‘극우단체’활동 경향과 비교적 낮은 ‘반 인습단체’활동 경향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II - 20> 동·서독 청소년의 극우활동 경향 및 반 인습활동 경향
(단위: %)

'극우단체'활동	서 독	동 독
Index 1	0.3	1.0
Index 2	0.9	2.8
Index 3	3.8	8.7
'반 인습단체'활동	서 독	동 독
Index 1	2.2	2.2
Index 2	14.6	12.2
Index 3	88.5	86.8
n	4,526	2,564

자료: 독일청소년연구소, 1992

'극우단체'활동에는 스킨, 파쇼 및 국수주의 단체 활동이 포함되고,

'반 인습단체'활동에는 평화운동, 인권보호 단체 및 제3세계활동이 포함된다.

Index 1: 적어도 한 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Index 2: 적어도 한 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가끔씩 모임을 갖고,
이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

Index 3: 적어도 한 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가끔씩 모임을 갖고,
이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혹은 이 단체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청소년

4) 세대별 국가의식의 변화

독일에서 국가관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연령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독일에만 특징적인 것인지 혹은 다른 국가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에 관한 다양한 양상이 연령에 따라,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찰 되어야 하겠지만, 표 II- 21은 11년 주기라는 비교적 단기적인 자료이므로, 연령에 따른 파악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아래의 도표는 출생년도에 따른 독일인의 국가우월주의 변화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출생년도에 있어 독일인의 국가우월주의 정도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다. 이는 과거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독일의 특징적인 양상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국가우월주의는 독일, 유럽국가를 막론하고 젊은세대 보다는 기성세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 는 현상인데, 국가관에 대한 세대적인 관점의 차이는 다른 유럽국가들 보다 독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전쟁 전 세대(1924-1944년생)와 저항운동 세대(1945년 이후 출생자)사이에는 국가관의 뚜렷한 구별이 나타나는데, 전쟁전의 기성세대와 전쟁후 젊은세대 사이의 차이가 도표에 잘 나타나 있다.

1982년부터 1988년 사이 기성세대의 국가관의 정도는 일관성 없이 증감하고 있으나, 젊은세대의 경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생활에의 동참, 즉 생활주기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예를들어 직업에 입문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는 등의 생활변화를 통해서 국가의식도 상승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988년과 1992년, 1993년에는 통일이라는 변수가 젊은세대의 국가관에 작용하는데,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국가우월주의의 정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의식의 변화는 생활주기의 변화와 연령의 영향이 모두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세대에선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국수주의적, 사회주의적 과거를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적인 공동체, 국제화된 세계를 이루려는 젊은세대의 노력으로 이해할수도 있겠다.

미래에 청소년들의 국가우월주의가 더 심해지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국수주의로 과장해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다른 유럽국가들도 청소년들의 근본 가치관과 국가우월

주의는 연관성이 있는데, 특히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일수록 국가우월주의 성향은 낮다. 통일독일의 경우 다른국가와는 달리 동·서독 청소년의 국가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이로인해 동·서독 청소년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을뿐 아니라, 이러한 이념적인 양극화 현상은 민주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공동체意識의 형성을 어렵게 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 정치적 참여권 및 물질적인 풍요를 주요골자로 하는 수행력있는 민주주의 체제는 반 국수주의의 확산에 기여하게 되지만, 반대로 정치분야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발전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치에 등을 돌리게 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독의 경우와 서독의 소외된 계층- 중앙 민주정치로부터 이탈하여 주변세력에 관심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 동독청소년의 극우적 단체활동은 실제로 호기심에 의해, 혹은 반 체제감정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민주정치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감의 결여상태에서는, 그러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많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념적 침투의 가능성이 커져, 민주적인 이상에서 비롯된 낯선 사람을 포용하는 공동체 의식은 붕괴되고 만다.

<표 II - 21> 서독과 유럽의 출생년도별 국가우월주의

(단위: %)

(서 독)	출	생	년	도			
년 도	- 1924	1924-1934	1935-1944	1945-1954	1955-1964	1965-	
1982	77.4	77.1	74.2	58.9	56.0	50.7	
1983	80.1	68.6	71.1	62.5	51.7	50.0	
1984	78.3	78.8	66.8	66.2	53.2	55.8	
1985	75.3	71.9	71.7	58.9	47.0	52.4	
1986	74.4	74.1	66.1	62.8	46.9	59.7	
1988	78.6	73.8	70.7	64.7	61.4	63.4	
1992	81.2	76.3	72.9	60.3	49.3	47.4	
1993	78.4	71.0	67.1	50.0	52.6	40.4	

(유럽평균)	출	생	년	도			
년 도	- 1924	1924-1934	1935-1944	1945-1954	1955-1964	1965-	
1982	88.8	85.9	83.7	79.8	76.7	80.8	
1983	89.7	89.5	86.2	85.2	82.4	87.5	
1984	91.4	89.0	87.3	84.4	81.1	81.1	
1985	92.9	89.2	89.3	85.2	82.6	84.4	
1986	90.9	88.4	85.2	85.2	82.3	86.5	
1988	88.9	85.2	85.9	83.2	81.7	83.8	

자료: Westle, 1995:239

백분을 표시는 '대우'와 '비교적' 긍정적인 국가우월주의를 표시한 것이다.

유럽평균은 독일을 제외한 유럽국가의 평균을 나타낸다.

5) 국가관의 특징적 양상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의 척도로써 성별이나 연령등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국가 우월주의적인 성향이 낮고, 통일국가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으며, 전통적인 국가관과 국수주의

적인 입장 및 극우적 단체에의 공감대가 낮고, 반대로 외국인에겐 좀더 관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 응답자와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태도나 국수주의적인 입장에 있어서 성별차이의 원인은 자주 거론되는 여자 청소년의 낮은 정치에의 관심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극우적인 청소년 하위문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낮고, 사회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강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과장된 남성우위주의와 여성에게 전통적인 역할을 부담지우는 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므로, 극우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공감도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남녀 성 역할에 대해 비교적 개방된 청소년(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Hoffmann-Lange 외, 1993).

전체 인구에서 볼 때, 연령에 따라 국가관에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국수주의적인 폐쇄성에 별 의미를 두지 않으며 국제적인 관계의 확장에 공감하는 등 청소년층의 국가관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동독의 젊은 청소년층이 전통적인 사고방식, 외국인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및 극우단체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는 등 예외적이다.

교육정도와 정치적 관심도는 국가관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수준과 정치에의 관심이 높을수록 국가 우월주의와 국수주의 정도는 낮다. 또한 외국인 적대주의와 극우적인 행동에 매우 부정적인 반면, 유럽 공동체 및 반 인습적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개인이 처한 특수상황적인 생활위치도 국가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실업자나 개인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국가 우월주의, 독일 및 유럽국가와의 유대성 정도가 낮은 반면 국수주의적이고 외국인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며 극우적인 행동양식에 공감한다. 경제적 차원에서의 만족이 자국의 정치체제에 자부심을 갖게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반면, 경제적인 불만족은 정치체제에의 소속감을 와해시키고, 국수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행동양식을 추종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추종하는 청소년은 통일독일에 깊은 유대감을 갖고, 강한 국가우월주의와 투철한 국가관을 지니며, 국수주의적이고 외국인 적대적인 행동양식을 취한다. 반면 급진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청소년의 경우 유럽 및 반 인습단체에 관심을 갖는 등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독청소년의 경우가 서독청소년의 경우 보다 더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서독청소년의 경우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도 그들의 국가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참여의식이나 자아실현 등 반 물질주의에 가치를 두고 있는 청소년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유럽과의 유대성이 깊으며, 국수주의적이고 외국인 적대적인 입장을 부정한다.

정당의 선호도 역시 국가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Republikaner(공화당원: 정치적 극우파)를 추종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정당과 청소년의 경우보다 더 국수주의적이고 외국인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며, 극우적 활동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공화당원들은 '국가의식', '외국의 문화적 침투' 등을 자주 거론하는데, 전통주의, 국수주의, 외국인 적대주의 경향이 공화당원을 선호하는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공화당원을 선호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이 더 강화된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통일직후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독일의 정치·사회적 변화상황을 청소년들의 사고, 가치관, 행동양식 등을 통해 재조명해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관련 문제상황의 극복을 위해 독일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 특히 동·서 지역간의 사회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격동기의 동독청소년들이 되도록 빨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지원하고 있는 동독지역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사회사업에 대해 다음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Ⅲ. 통일독일의 청소년육성

1. 정부의 동독지역 지원 정책
2. 독일의 청소년정책
3. 독일의 청소년사업



통일독일의 청소년육성¹⁾

1. 정부의 동독지역 지원 정책

통일후 독일정부는 기본법따른 모든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썼다. 동·서 지역간의 사회문화적 격차를 줄이기위해 통일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동독에 대한 실제적 지원은 “Fonds Deutsche Einheit” (독일통일 기금),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동독발전공동체), “Kommunale Investitionspauschale” (지방투자 기금)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가 수행한 동독지역 지원정책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아동과 청소년후원사업(예를들어 탁아시설과 특히 문제상황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사회사업 분야 및 청소년 여가시설제공 분야 등)을 위해 20,000 일자리까지 점차적으로 확보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와함께 근로촉진법 (Arbeitsförderungsgesetz : AFG)에 따른 청소년 복지 및 후원정책은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청소년분야의 구조확립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된다.

- 근로촉진법(AFG)에 따라 재정지원되는 자격향상 및 보습교육방침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가정- 및 사회후원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사람에게 동시에 혜택을 준다.

1) 이 장은 1994년 독일의 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에서 발간된 제9차 청소년보고서 (Neunter Jugendbericht)와 독일 청소년상황 (Situation der Jugend in Deutschland)중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 정리하였다.

- 근로촉진법 제 249조에 의한 동독인의 근로보장에 따라 실업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며, 아울러 동독지역의 민간 아동- 및 청소년후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구축한다.

- 여성청소년부의 1991년 연방청소년 계획에 따라, 민간 청소년후원단체가 동독지역의 청소년후원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부가적으로 47 Mio. DM (약 263억 원)을 예치해 둔다.

이 금액은 다음해에도 계속 승인되었고, 서독의 각 연방도 옛 동독지역의 청소년후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 구축을 위해 1991년 1 Mio. DM (약 56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각 연방은 같은해에 동서독 청소년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인 "Sommer der Begegnung" (만남의 여름)을 위해 20 Mio. DM (약 112억 원)을 예치했다.

이 외에도 민간 아동 및 청소년후원 단체의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AFT-Programm)과 폭력근절 프로그램을 근거로 1992년에서 1994년까지 각각 90 Mio. DM (약 504억 원) 과 60 Mio. DM (약 336억 원)이 확보됐다. 이러한 각종 진흥프로그램은 통일조약 제 32조에 따른 민간 복지증진과 청소년후원체계의 확립에 기여하게 되었다.

2. 독일의 청소년정책

독일통일로 인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변화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통일이 더많은 자유를 향유하게 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시킨 것이었다. 그로인해 오늘날의 청소년세대와 그들 특유의 문제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 최근의 청소년연구는 청소년들은 예전에 비해 더 낙관적이며 "미래가 없는 세대"로서의 청소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 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극에 달한 청소년 폭력현장에 직면해 당혹해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된 현상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욕구 및 불안등에 좀더 가까이 접근해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이러한 문제상황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인지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청소년들 또한 정치와 사회에 책임감있게 동참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데, 학교, 직업훈련기관 및 청소년사업은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정부는 지난 40년에 걸쳐 재정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1950년 7,500,000 DM (약 42억)에서 1989년에는 120,000,000 DM (약 670억)으로 증가하였으며 통합후엔 다시 225,000,000 DM (약 1,260억)으로 늘어났다.

독일정부는 1991년 이래 이러한 동독지역 청소년사업에 청소년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수년간의 독재정치에서 성장한 동독청소년은 아무런 준비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맞아 자본주의에 적응해야 했다. 이러한 혼란기에 청소년들은 그대로 방치되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기성세대나 새로이 구성된 사회국가기관들 역시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권위적 규율은 사라졌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위상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상황은 중앙행정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자유시장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더욱 악화되었는데, 실업과 그로인한 사회적인 긴장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게하고 삶에 대한 목표 설정을 어렵게 했다.

독일정부는 1992/1993년 동독지역 청소년후원사업의 지원을 위해 7,500만 DM (약 420억)을 책정했다.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실습과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었는데, 독일정부는 이것을 청소년정책의 주요과제로 보고 여러가지 사업의 실행을 통해 추진했다. 그리하여 1991-1993년 모든 동독지역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가 주어질수 있었고, 다양한 시장경제정책, 직업교육정책을 통해 25세미만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현저히 낮아질수 있었다.

1) 연방 아동 및 청소년계획

정부의 청소년육성정책은 민간 청소년후원사업을 지원하고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에 동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육성에 대한 법적근거는 1993년 12월 20일 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계획에 관한 지침에 마련되었는데, 이 지침은 1985년 11월 6일 확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 오던 정부의 청소년계획에 관한 지침을 해지하고 1994년 1월부터 새로이 시행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계획은 27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 및 공공·민간 청소년후원 단체를 주 목적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독일에 살고있는 외국인 및 외국인 자녀도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근거안에서 청소년과 청소년후원 단체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동·서독청소년의 공동성장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여 수행력있는 연방차원의 민간 청소년후원 단체 (예:청소년연합, 청소년사회사업, 청소년문화사업 등)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고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중요시하여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서구유럽의 통합과 동유럽의 변화로 인해 국제적인 청소년사업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있는 경향이다.

1993년 정부의 청소년계획 기본방침에 따른 총예산은 218,778,000 DM (약 1,225억 원)인데 각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II - 1> 청소년계획에 따른 청소년육성 관련 정부예산 (1993)
(단위: DM)

지원분야	배정예산
1. 청소년연합 이외에서 실시되는 정치교육	21,551,290
2. 국제 청소년사업	29,804,280
3. 문화교육	12,803,059
4. 청소년 스포츠	1,045,000
5. 사회교육	17,546,500
6. 청소년사회사업	23,110,951
7. 장애인 청소년사업	3,030,500
8. 중앙 재교육기관	3,296,500
9. 전문 청소년사회사업가의 국제교류	446,000
10. 시범사업 및 효과분석	1,070,880
11. 중앙 청소년 및 대학생 연합	26,148,554
12. 최고 자유민간 복지연합	4,785,000
13. 중앙 청소년후원 전문조직	5,390,515
14. 베르린 특별계획	2,828,500
15. 기타 세부 중앙대책	4,357,150
16. 근로청소년을 위한 독일-미국간의 청소년교류	760,000
17. 통일정부의 청소년후원사업 특별대책	26,776,424
18. 여자 청소년사업	5,038,700
19. 청소년후원사업 관련 정보, 상담 및 재교육사업	1,644,450
20. 보조교육 및 기타 보조	3,593,825
21. 아동을 위한 학교외- 및 가정외 지원	2,631,500
22. 정부 청소년계획 개선	770,352
23. "청소년계획 대상그룹 관련 사전 예방조치" 수행사업	20,355,070
계	218,778,000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1994:66

1990년 처음으로 옛 동독지역의 특별대책 마련을 위해 통합과 관련된 사업에 부가적 예산이 배치되었다. 동독지역의 민간 청소년후원 사업의

확립과 동·서독 청소년의 공동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1990년 이래 모든 연방청소년계획 사업중 특히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보호법 사전작업에서 그간 연방청소년계획에 따라 지원되었던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사회사업 이외에 모든 청소년후원 사업이 총 집결되어 1991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보충교육과 탁아지원에 대한 예산이 새로이 책정되었다.

1992년 이래 청소년폭력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의 범주내에서 통일정부의 각 지역에 합당한 폭력 사전예방적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외에 1992년 이래 계속된 민간 청소년후원단체의 확립(AFT)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모든 연방청소년계획은 1994년부터 시행되는 연방 아동 및 청소년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 까지 계속되었다.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연방청소년계획에 따라 책정된 정부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III - 2> 연도별 청소년육성 관련 정부예산 (1950~1993년)

년 도	예 산 (DM)
1950	7,500,000 (약 42억 원)
1960	45,164,000 (약 253억 원)
1970	60,400,000 (약 338억 원)
1980	121,604,000 (약 681억 원)
1989	120,200,000 (약 675억 원)
1990	132,200,000 (약 740억 원)
1991	180,000,000 (약 1,008억 원)
1992	203,000,000 (약 1,137억 원)
1993	219,000,000 (약 1,226억 원)

연방청소년계획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매년 그대로 유지되지만, 전년의 청소년계획에 근거한 지원에 따라 금년의 청소년후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1993년까지의 연방청소년계획은 1994년부터 시행되는 아동 및 청소년계획으로 계속 이어졌다.

통일정부에서의 민간 청소년후원 단체의 확립, 청소년폭력 예방사업 및 청소년관련사업의 다국적 공동작업등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러한 특별사업에 관련된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2) 연방 청소년육성

(1) 여성 청소년부의 청소년 육성사업

① 동독지역 민간 청소년후원단체 확립사업 (AFT-Programm)²⁾

아동 및 청소년복지법 (KJHG)³⁾ 제1조 83항 1절과 통일조약 제 32조에 따라 정부는 연방청소년계획을 보완하여 동독지역에 필요한 특별 청소년정책사업을 수행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1992년 50 Mio. DM (280억 원)을 책정했는데, 그해 수립된 중점 수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간 청소년후원단체 구성, 특히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사회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AFT 1)
2. 민간 청소년후원단체를 구성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 (AFT 2)
3. 사업 수행자에 대한 장려, 능력향상 및 현직교육실시 (AFT 3)

2) AFT-Programm : Programm zum Aus- und Aufbau von Trägern der freien Jugendhilf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3)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이 중 AFT 2와 AFT 3은 1993년에도 계속되었다. 위의 제 1 프로그램에 따르면 가능한 한 많은 청소년조직 및 청소년단체가 그 크기와 조직구조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사회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 체제확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많은 소규모 단체를 AFT에 동참시키기 위해 지방 청소년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동참의식을 갖도록 하기위해 청소년 자신이 관심을 갖고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한 대안에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제 1 프로그램에 속하는 중점분야는 다음과 같다:

- 일반, 정치, 사회, 보건, 문화, 자연, 기술학습을 겸비한 교외 청소년사업
- 스포츠, 놀이 및 동아리 청소년사업
- 취업- 및 가족관련 청소년사회사업
- 국제 청소년사업
- 청소년상담
- 청소년전용공간

이 계획에 따라 동독지역에는 총 20 Mio. DM (11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각 지역별 예산분포 및 신청사업수는 다음과 같다:

<표 III - 3> 제 1 AFT 프로그램의 각 지역별 예산분포 및 신청사업수

지 역	예 산 (사 업 수)
Berlin	1.6 Mio. DM (316개 사업)
Brandenburg	3.2 Mio. DM (728개 사업)
Mecklenburg/Vorp.	2.8 Mio. DM (778개 사업)
Sachsen	5.2 Mio. DM (1,924개 사업)
Sachsen-Anhalt	3.6 Mio. DM (585개 사업)
Türingen	3.2 Mio. DM (1,127개 사업)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재구성, 1994:67-68

그 외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소년 전용공간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3.4 Mio. DM (약 19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계획에 따라 청소년공간 보수작업, 도구 및 가구의 구입, 청소년전용공간 마련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확보할수 있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것이었다.

제 2 AFT 프로그램에 따라 1992년과 1993년 민간 청소년후원 단체 구성을 위한 지역 교류국 설립에 정부는 각각 10 Mio. DM (약 56억 원)을 지원했다. 연방 및 지방의 결정을 거쳐 민간 청소년후원 단체에 의해 설립된 130개 교류국은 공공·민간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단체의 사업 준비 및 시행 등에 원조한다. 중앙단체의 전 지역에 걸친 사업경험을 활용하고, 모든 지역의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회사업의 동등한 기회제공을 확립하기 위해 각 단체들에 감독관이 배치되었는데, 그들의 임무는 연합구조를 구성하고, 연합에서 일할 사람을 찾아 상담하고 재교육 시키는 것이다.

제 3 AFT 프로그램은 책임감을 갖고 민주적인 청소년후원사업의 확립에 동참할 준비를 갖춘 시민을 위해 다양한 현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경험이 있는 단체들은 조직, 방법론 및 교수법 등의 개선을 위해 시민들을 돕는 기능을 한다. 시민참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 세미나 및 회의 등을 통해 장려되어졌는데, 이에대한 정부예산은 1992년 약 8,8 Mio. DM (약 49억 원)이었다. 1992년에 제출된 1,817 신청서중 1,218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402단체에 7,7 Mio. DM (약 43억 원)의 혜택이 주어졌다.

정부는 이 AFT-Programm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사업은 수행력있는 청소년후원 사업의 확립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적으로 운영되던 청소년후원 및 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원은 그 당시 단지 제한된 범주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로 인해 1992년 말 독일의 연방의회에서 원칙적으로 1992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AFT-Programm중 제 2 Programm과

제 3 Programm에 해당하는 상담과 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1993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결정했다.

AFT 2와 3에 대한 예산은 축소되긴 했지만 1994년에도 계속하여 배정된다. AFT-Programm에 대한 지원의 감소는 다음해에도 계속되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을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동독지역에만 국한하여 지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995년 연방 국채정리사업에 따라 지역별 재정균등이란 새로운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정부는 점차적으로 지방 청소년정책 사업을 줄여나갔다.

AFT 2에 의한 지역교류국은 청소년후원사업의 구조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각 지방의 평가를 고려하여 정부는 지역교류국의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를통해 최고 지방청소년청에 1995년에도 지방에 전년과 같은수의 교류국을 계속 보유한다는 조건하에 보조금을 책정했는데, 최소한 지역교류국의 상담- 및 정보망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② 청소년폭력 근절사업

이미 1991년 여름부터 연방 여성청소년성은 동독지역과 베르린의 청소년의원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패싸움, 외국인 및 소수약자에 대한 난동을 저지하기위해 “공격 및 폭력근절사업” (Aktionsprogramm gegen Aggression und Gewalt: AgAG)을 벌이기 시작했다.

1992년~1994년까지 실시된 이 폭력근절사업엔 매년 20 Mio. DM (약 11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선택된 30개 지역에서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기위한 청소년사업, 문화적·교육적 내용을 갖춘 여가시설형성, 거리사회사업, 동아리사업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조직적 근거, 전문적 보조 및 재정적인 지원의 틀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폭력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 개인의 문제를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 조정능력을 길러주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또다른 경험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 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각 지역에는 사회교육분야에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요원이 위임되었는데, 이를통해

전 사업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었고, 전문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할수 있었다.

또한 사업요원에게는 수행임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사회교육적인 능력을 보완하기위해 다양한 현직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AgAG-정보집 2/93에 전체 사업구조와 30개 지역에서의 140개 사업을 수록한 자료집이 “공격 및 폭력근절사업 1년:첫번째 결과와 경험”이란 제목으로 공개되었다.

이 첫 번째의 중간보고서에는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수 있는 경험들이 수록 되 있다.

- 사회교육학 및 사회사업은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하는 어려운 대상에 꼭 필요하다.
-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대상 청소년들은 적절한 기회제공과 능력 있는 교육자를 통해 제공된 기회를 받아들여 동참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다.
- 대상 청소년을 능력있는 교육자가 함께하는 적절한 사업에 연결시키는 것이 성공하면 폭력성향이 저하되고 이념, 적대감, 편견등이 교정 된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노력을 요하는 장기간의 과정이므로 2년간의 사업 기간에선 단지 일시적인 판단이 가능할 뿐이다.

여성청소년부의 장관 및 동독지역과 베르린의 청소년의원들은 1993년 4월 5일 서로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993년 12월 9일 극우주의, 외국인 적대감정 및 외국인 폭력에 관해 비스바덴에서 개최된 특별청소년부회의에서도 이 폭력근절사업의 문제점과 경험에 대해 보고되고 토론되어졌다. 여성청소년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전국적인 보습교육을 통해 이 사업으로부터의 경험을 모든 단체에 보급시키자는 전 지역 청소년의원들의 요구를 수락했다. 또한 여성청소년부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교육적 지도방법만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또다는 인생진로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기회”라는 사회학자 Roland Eckert박사의 의견을 지지했다.

한편 1993년의 청소년부 회의에서는 이 사업이 정치적 동기를 가진 폭력청소년과 연관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했는데, 극우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악용될 위험이 있고, 사업수행자에게 혹은 대중매체를 통한 비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③ 정보-, 상담-, 보습교육을 통한 청소년후원사업 (IBFJ-Programm)⁴⁾

여성청소년부로부터 지원되는 이 사업은 모든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후원사업 수행자들에 대한 보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보, 상담, 보습교육을 질적으로 향상하여 청소년후원사업의 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1990년 10월 15일 IBFJ 사업이 시작됐다. 1993년 6월까지 청소년후원사업중 32개 부분분야에 287개 세미나가 제공되었는데, 공공 혹은 민간 청소년후원사업에 관계된 4,800명의 담당자가 이 IBFJ사업에서 제공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세미나 발표는 주로 서독 청소년청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동독지역 공공 청소년후원사업의 전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동독지역 청소년청 직원의 60% 이상이 정기적으로 IBFJ사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 IBFJ는 각 동독 지방청소년청과도 협력하여, 각 지방에서 39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여기에 1,087명의 청소년후원사업 관련 직원이 참가했다.

동독지역 공공 청소년단체의 발전 및 공공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 등은 IBFJ가 1992년 9월 25일 - 27일 개최한 회의의 중점 논의사항인데, 25개 주제발표중 260여명의 참가자가 동독지역의 청소년후원 발전의 문제점 토론에 참석했다.

IBFJ내에서 동독 청소년후원사업을 조속히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

4) IBFJ-Programm : Programm zum Informations-, Beratungs-, Fortbildungsdienst Jugendhilfe

해 실행된 동·서독 청소년후원사업 실무자의 공동작업은 서로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밀접한 사업관계를 형성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기관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시점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부는 이 시점을 1995년 부터로 잡고 있다.

(2) 타 부서의 청소년육성 사업

독일의 노동사회부와 노동청은 취업진흥안에 따라 사회 및 청소년분야의 기능을 확고히하는데 많은 지원을 했는데, 탁아소설립, 문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사회사업, 청소년여가시설의 제공등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후원사업을 위해 20,000 일자리를 확보하여 재정적 지원을 했다. 또한 동독인 취업장려안에 따라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에 재정적인 보조를 해 주었고, 아동 및 청소년후원사업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했다. 노동청은 환경-, 사회- 및 청소년분야 사업 종사자에게 별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했는데, 1993년 말 까지 약 60,000~70,000 직원들이 동독인 취업장려안에 따른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청소년후원 및 청소년사회사업 분야 종사자들에게 많은 부분이 돌아갔다.

또한 노동사회부가 관할하고 있는 유럽 사회기금의 범위내에서, 청소년들의 취업생활 입문을 위한 지원이 주어졌다. 주요 대상은 실업 청소년이었는데, 그들에게 취업교육, 재교육, 보습교육 등을 제공해 취업기회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동독지역 청소년문화에 대한 지원은 통일조약 제 35조에 의한 사회문화시설 사업에 따라 내무부에서 지원했는데, 사회문화시설과 청소년교육시설 및 음악학교의 설립, 확충에 중점적으로 보조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부는 학생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체류를 지원했는데, 이러한 기회의 제공을 통해 참가자들은 개발도상국의 현장에서 그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고, 투철한 직업관을 갖게되며, 후에 개발정책적인 과업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이 교환학생제도는 외무부를 통해서도 지원되어진다.

3) 지방 청소년육성

위에서 언급한 연방차원의 청소년육성은 주로 여성청소년부가 주도하는 동독지역 청소년후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독지역 민간 청소년후원사업의 확립과 동·서독청소년들의 공동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1990년 이래 연방청소년계획에 따른 모든 사업중 특히 동독지역 청소년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연방 청소년육성을 토대로 독일의 13개 지방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느부분을 중점지원분야로 정해놓고 있는지, 청소년육성에 관한 입장은 어떤 지역별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바덴-뷔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이 지역에서 지방 청소년계획에 따라 청소년휴양, 청소년연합, 청소년사업, 청소년보호대책, 마약근절대책, 청소년장학금, 국제청소년교류, 청소년음악, 지역문화, 지방청소년육성등을 중점지원분야로 정했다.

이 외에 약물남용대책, 외국 망명자통합, 문제아동 및 장애아동 지원, 학생기숙사, 실업 청소년대책, 문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사회사업, 외국인 아동 및 청소년 통합 등의 사업을 지원했다.

(2) 바이에른 (Bayern)

이 지역의 중점지원분야는 청소년 및 가족 상담소, 부모교육, 편부모에 대한 지원등과 같은 가족후원, 청소년 취업입문에 대한 지원 및 범죄청소년 후원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후원과 관련된 지원에는 전문인력의 재교육 및 상담, 학문적 연구, 공공후원모델등이 있는데, 이 공공후원모델 사업을 통해 공공 청소년후원 단체는 새로운 공공 후원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보 할 수 있었다.

(3) 베르린 (Berlin)

베르린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중점적 내용은 청소년의 학교외 교육 및 재교육, 국제교류, 청소년의 관심을 고려한 여가활동의 제공등으로 요약된다. 이외에 외국인청소년 융화정책,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예방대책, 사회교육적인 효과를 지닌 거리사회사업, 폭력예방대책, 문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다.

(4)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이 지방의 중점 지원사업으로는 학교외 청소년교육, 휴양지 제공, 국제교류, 청소년 여가시설 확보와 건축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및 투자장려 등을 들 수 있다.

(5) 헤센 (Hessen)

이 지역에서는 청소년연합사업, 청소년청의 지방청소년사업, 지방 청소년단체 지원, 학교외 청소년교육 및 청소년사업에의 참여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다. 특히 학교에서 직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청소년 실업 문제는 청소년사회사업 분야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았다.

(6) 메클렌부르크-휘포먼 (Mecklenburg-Vorpommern)

이 지역의 지방청소년계획에 따라 청소년사업의 시범프로그램 및 행사, 청소년사업 종사자의 재교육, 아동 및 청소년 휴양, 국제- 혹은 다국적 청소년사업, 문제청소년 상담, 청소년 사회사업, 범죄 청소년후원, 아동 및 청소년 보호대책, 아동 및 청소년 문화사업, 청소년사업 장소의 재건축 및 개축등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7) 니더작센 (Niedersachsen)

이 지역에서는 청소년폭력, 극우주의, 외국인 적대주의, 여자 청소년사업, 환경 및 자연보호 등의 주제가 청소년사업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특히 이 지방의 여성부는 직업과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자 청소년사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그 외에 여자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한 지원,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 여자 청소년들의 자아확립과정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8) 노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이 지역의 지방청소년계획에서 주로 다루진 분야는 청소년연합사업, 개방 청소년사업, 정치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사회사업이다.

(9) 라인란드-팔츠 (Rheinland-Pfalz)

지방 청소년사업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시범 아동 및 청소년사업, 다국적 청소년사업 (예: 다문화 공동생활을 위한 독일 청소년과 외국청소년의 감수성 프로그램), 문화 청소년사업, 폭력예방사업 및 성교육사업 등을 중점 지원사업으로 정했다.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으로는 지방차원의 지원을 활성화하여 명예직의 참여를 강화하고,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단체 및 연합에 대한 지원을 높이며, 청소년사업의 주요인력과 명예직 인력에 대한 현직교육의 강화등을 들 수 있다.

(10) 작센 (Sachsen)

이 지역의 중점사업은 민간단체의 구성, 유동적인 보충교육 형태의 확립, 청소년재판에 대한 후원, 청소년직업후원, 청소년보호, 청소년사회사업, 교육상담 및 수용소 교육의 강화 등이다. 중점적인 청소년사업으로는 지방차원의 청소년사업을 위한 사회시설 프로그램, 청소년 메체물사업, 청소년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 청소년 음악문화교육, 청소년 자연생태학 교육, 청소년 자연과학-기술 교육 및 청소년 정치-사회, 역사-인문교육등을 들 수 있다.

(11)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청소년사업의 명목으로 청소년교육, 청소년여가활동 제공, 청소년여가시설, 국제청소년교류 및 청소년연합 등에 지원되어졌고, 청소년사회사업 분야에서는 불우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청소년폭력예방사업을 지원했다. 이외에 교육보조, 직업교육, 여가 및 문화와 관련된 활동의 제공등이 있다.

(12) 슈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이 지역의 중점지원 분야는 청소년연합 및 지방청소년단체, 지방협정에 의한 청소년 문화교육 협력체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그 외에 특히 동독지역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13) 튜링엔 (Türingen)

이 지역 지방청소년육성계획에 따라 청소년 개방의 집, 청소년교육 관련 발표자, 청소년사업 명예인력, 문화 청소년사업 및 국제 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회사업의 구조확립, 청소년시설의 확충, 교육지원 및 보조교육에 대한 지원, 청소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요인력 및 명예인력에 대한 자격향상 등에 대한 지원에 특히 비중을 두고있다.

3. 독일의 청소년사업

이 장에서는 주로 위의 연방 및 지방청소년육성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청소년사업중 통일후 독일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사업, 취업에 입문하는데 있어 개인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청소년들을 돕기위한 취업관련 청소년후원사업 및 청소년후원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관련시설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여성 청소년사업

여성청소년부의 청소년계획에는 여자 청소년과 젊은여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여자 청소년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1993년 약 5 Mio. DM (약 28억 원)에 달했다.

‘중앙 청소년 및 학생연합’프로그램에서는 여자 청소년과 젊은여성을 위한 특별행사가 제공되었는데, 이 행사는 주로 여자 청소년이 그들의 삶을 계획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세미나, 취업정보, 여성회의 등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여성청소년부 지원사업인 ‘기술산업분야에의 여성진출’프로그램은 여성실업률이 높은 기술분야에 여성들로 하여금 직업소명의식을 갖게하여 직업교육의 기회와 취업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여성청소년부는 또한 1992년 7월부터 3년간에 걸쳐 스포츠 교육사업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여자 청소년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스포츠, 운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성공했다.

여성청소년부 이외에 가족노인부도 여자 청소년을 위한 특별대안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예를들어 “불우한 처지에 있는 어린나이의 엄마와 그 자녀에 대한 원조 - 교육 및 지원” 실습모형은 청소년사회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슈트트가르트에서 수행되었다. 이 사업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젊은 임신부와 엄마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교육능력을 키워주고, 일자리 근처에 탁아소 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의 실제적 원조를 통해 이 사업의 목적은 실현될 수 있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성폭력과 성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었는데, 특히 “근친으로부터 성적 고통을 당하는 여자 청소년”의 문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했다.

200개 이상의 금속 및 전기산업, 즉 “남성직업에의 여성진출” 시범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라 교육과학부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했는데, 여자 청소년들이 특히 기술분야의 직업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직업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추진된 이 사업은 학교, 노동청 및 기업의 공동협력하에 추진되었고, 서비스센터 및 상담국이 있어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 여자청소년에게 조언과 협조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 사업의 결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여자청소년이 직업에 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직업동기 및 직업관에 대한 대안책, 상담대책 등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1989년 8월 교육과학부는 여자청소년들이 장래 기술관련 직업을 갖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인 직업에 대한 편견과 전형적인 성역할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도록 하기위해 직업의식에 관한 캠페인을 전 지역적으로 벌였다. 이로인해 많은 여성들이 기술관련 직업분야에 소명의식을 갖게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여성들을 위해 실습교육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1991년 이 캠페인은 기업의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동독지역에 까지 확산되었다.

경제협력부의 ASA-Programm⁵⁾ (학생 및 근로자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체류사업)에서 여성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이며, 여자청소년의 학생프로그램 참여율은 1991년~1993년 약 60%, 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율은 60~70%에 달한다.

2) 취업관련 청소년후원 사업

동독청소년들에 있어 공산정권의 붕괴는 청소년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강요하는 독재정권의 종말을 의미했다. 청소년들은 위로부터 지시받는 명령사회로부터 아무런 준비없이 해방되었는데, 혁신적인 체제변화와 사회변동은 청소년들에게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것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청소년기에 주어지는 발달과제,

5) Arbeits- und Studienaufenthalte in Afrika, Asien und Lateinamerika

즉 폭넓은 세계에 적응하고 독창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등 복잡한 사회를 헤쳐가는 문제는 이러한 모든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욱더 어려워졌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취업상황이었다. 학교생활을 마치고 직업교육 혹은 취업에 입문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통의 사회적 조건하에서도 헤쳐가기 어려운 이 과정은 커다란 사회적 변화로 인한 경제적 불황하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다음은 독일 청소년연구소(뮌헨)의 분소인 라이프찌히 청소년연구소에서 수행한 청소년후원사업중 “취업중심적 청소년사회사업”⁶⁾을 소개한 것이다. 이 사업은 취업전선에 입문하는데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갖고있는 청소년을 도와 취업생활을 위한 준비를 할수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의 후원단계는 1994년 ~ 1997년사이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음의 세가지 수행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1. “학령기의 사전예방적 기회제공”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무교육 시기에 학교를 중퇴하거나 직업교육기간중 중도하차 하는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과 관련된 기회외 제공을 어떤 부수적인 도움없이도 실제로 받아들일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여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학교나 직업학교등 현존의 교육기관들을 통해서도 성과를 거둘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을 우선대상으로 한다.
2. 정규 직업교육과정에서 어떠한 도움없이도 졸업을 못하거나 취업시장 정보를 제공 받을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자격획득의 기회와 일자

6) 이 사업보고서는 1996. 6. 6.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의회의 밤’에서 발표되었는데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Gabriel, G 1996 : Wissenschaftliche Begleitung des
Bundesjahresplan-Modellprogramms
“Arbeitsweltbezogenen Jugendsozialarbeit”

리의 제공”을 하는데 두 번째 중점을 둔다. 특히 정해진 기간에 직업 교육과 취업에의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

3. 마지막으로 역점을 두는 것은 일자리와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계획을 전개시켜 시험해 보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을 갖고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주거기회의 가능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자격획득의 기회와 일자리의 제공”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또한 청소년들에게 독립된 생활을 이루어나갈 능력을 키워준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의 청소년들이 학교로부터 직업생활로 이동하는 과정의 조건들이 동·서독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동·서독의 사업이 매우 다른 조직적, 재정적, 정치적 출발점을 갖고있다는 것이다.

1996년 현재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지원계획에는 83개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의 숫자적 측면에서 볼 때 옛 동독지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47개 사업). 이 시범사업의 범주내에서 작센에는 현재 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동작센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 여가분야와 국제문화적 청소년사업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취업중심적 청소년사회사업”은, 동독의 상황을 고려한 취업분야에 역점을 두고 수행하고 있다. 다시말해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직교육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주거지역에도 관심을 갖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취업대안의 범주내에서 자신의 주거공간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한다. 여기에 수행연구팀은 이러한 대안들이 지역적 조건과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수행연구의 실제적 효과는 세가지 중점사업의 전개양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사업에 역점을 두고있는 과제영역은 민간기업을 철저히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관련 청소년사회사업 단체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대관계를 유지한 결과 청소년

년사회사업과 경제간의 거리감을 좁힐수 있고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질수 있는데, 예를들어 여자청소년에게 직업교육 기회의 제공,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갖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업에서 실습시행, 실업 청소년을 위한 배움의 터전으로써 기업 선정 등을 들 수 있다.

2. 또다른 과제영역은 지금까지 기업, 혹은 유사기업 구조에 형식적으로 조직되어 있던 '자격획득의 기회와 일자리의 제공'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기회의 제공을 통해선 청소년들이 취업시장에서 요구하는 취업조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마지막 과제영역은 기회제공의 형태에 관련된 것인데, 즉 청소년들의 주거공간의 공급이 그들의 작업능력의 정도와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된 주거공간이 있어 직업교육을 받게 될 경우 자립심을 기르는데 오히려 저해가 되므로 청소년들이 어떤 특정한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그들 미래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3) 독일 청소년사업 시설

청소년후원은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아동 및 청소년보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보충교육, 탁아보조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설과 행정체계 및 충분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넓은 의미의 청소년후원사업 관련 시설(혹은 기관)에는 청소년후원관련 사무국, 민간단체 사무소, 그리고 청소년후원단체협의회등이 있다. 1991년 말 옛 동독지역에는 20,843개 청소년후원 관련 기관과 203,081 실무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옛 서독지역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숫자적 측면에서 앞서있다. 서독지역에는 -동독에 비해 약 4배 많은 인구와 3,4배 많은 아동 및 청소년인구- 1990년 말 54,120개 기관과 333,888명의 실무자가 있었는데

데, 달리 표현하면 1990년 말 서독에는 인구 100,000명당 85개 기관과 524명의 실무자, 1991년말 옛 동독지역엔 132개 기관과 1,286명의 실무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옛 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후원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표 III - 4 참조).

모든 청소년후원사업 관련 기관중 탁아시설이 19,127개로 전체 91,8%를 차지한다. 302개 민간단체 사무국, 사무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좁은의미의 청소년후원 관련 시설 및 기관 1,414개 (20,509직원)중 538개 보충교육시설이 있는데, 이중 교육책임자가 없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소년원이 390개로 첫째순위에 있다. 이외에 장애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 287개,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 490개 시설 및 99개 상담소가 있다.

도표에서 알수 있듯이, 1991년말 동독지역에는 민간단체가 아주 소규모로 확산되어 있다. 동독에 단지 66개의 민간단체 사무국, 협의회 등이 있는 반면, 서독에는 그것의 25배에 해당하는 1,649개가 있어 동독지역의 민간단체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 사무국, 협의회 등을 제외한 순수 청소년후원 관련 기관에도 국공립기관의 양적우위는 여전히 나타나는데, 전체 20,541기관중 민간기관은 단지 1,161개로 94,3%가 국공립기관이다. 민간 청소년후원 관련 시설 및 기관중 탁아시설 부문은 특히 침체되어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탁아시설은 단지 4,5% (전체 19,127중 국공립 18,260, 사립 867)에 불과하다.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중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부문은 상담기관과 청소년사업 관련 기관으로 각각 41,4%와 24,7%를 차지한다. 이와는 달리 서독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순수 청소년후원 관련 기관은 70% (전체 51,715기관중 36,339기관)정도이고, 각개 분야에 따라 70%를 훨씬 넘는 기관도 있다.

<표 III - 4> 청소년후원사업 관련 기관

(단위: 개)

	동 독 지 역 (1991.12.31)			서 독 지 역 (1990.12.31)		
	전	체	공공단체 민간단체	전	체	공공단체 민간단체
탁아시설	19,127	18,260	867	32,905	10,974	21,931
보충 교육시설	538	460	78	2,747	359	2,388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을 위한 시설	287	233	54	922	137	785
청소년사업시설	490	369	121	13,443	3,538	9,905
상담소	99	58	41	1,698	368	1,330
소 계	20,541	19,380	1,161	51,715	15,376	36,339
민간단체 사무국						
사무소, 단체협의회	302	236	66	2,405	756	1,649
총 기관	20,843	19,616	1,227	54,120	16,132	37,988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1994:77

IV. 결 론

1. 요약

2. 제언

IV

결론

본 연구는 국가간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있는 독일의 상황을 청소년들의 사고, 가치관, 행동양식등을 통해 재 조명해 봄으로써, 통합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 져야하는 것은 무엇이며, 독일정부는 이러한 혼란상황의 극복을 위해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여러 청소년관련 기관이 통일전후 몇 년간에 걸쳐 시행한 연구조사 사업의 설문자료를 주로 분석, 정리하여, 통일전후 동·서독청소년의 행동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 통일사회 적응과정 등을 조사하였고, 이와 관련된 여성청소년부의 청소년육성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그 모양이나 과정은 독일과 다를것이나 우리도 유사한 상황을 체험하게 될 것이므로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을 촉진시킬수 있는 몇가지 사항을 제안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요약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통일독일의 청소년

① 동독청소년의 의식변화와 독일통일

동독사회주의의 붕괴과정은 정치체제의 정당성 상실과 동독시민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근거를 둔다. 동독시민들이 서독에 눈뜨기 시작한 주된 요인은 서독의 높은 정치적, 민주적 참여의 가능성보다는 그곳에 내재하고 있는 개인적인 자유와 소비성향, 즉 동독시민의 가치관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동·서통합 이후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동독청소년들은 좀더 빨리 경제적 안정과 자유로운 생활을 획득하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의식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의 혼란이 따르는데, 1990년 여름 독일청소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동독청소년이 독일의 통합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했고, 단지 25%가 독일통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반면 서독에서는 20%정도만이 독일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30%이상이 통일이 개인생활에 부정적영향을 미칠것이라 응답했다.

통일이 가져다준 정치적 자유와 소비에 대한 욕구의 충족은 곧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 대치되었는데, 1990년 여름이후 일자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낙관적 예측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시점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청소년에게 뿐만 아니라 동독시민 전체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장래의 학교나 직업과 관련된 불안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통일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하지는 않았으며, 근본적으로는 독일통일을 지지하고 있었다.

② 독일통일과 청소년 생활조건변화

독일이 통일된 2년후 독일청소년연구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이 그들의 개인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

다. 그 응답은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간에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독청소년들이 통일로 인해 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는 반면, 많은 서독청소년들은 통일이 개인생활에 부정적 영향 혹은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서독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통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부담이 동독청소년들에 비해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동독청소년들에게 통일은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만, 한편 부정적인 변화도 내포하고 있다. 여행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개인 능력발휘의 자유 및 소비의 자유 등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었고, 부정적으로는 새롭게 경험하는 실업, 폭력및 범죄문제와 자발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통일사회가 겪고있는 경제·사회적 동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동독청소년들은 서독청소년과는 달리 통일의 부정적인 변화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통일후 생활조건의 변화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동독청소년들은 통일후 그들의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독청소년들에 비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서독 청소년의 과반수가량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동독의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생활만족도는 30%남짓에 불과했다.

한편 동독청소년의 40%이상이 통일후 그들 개인의 경제사정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통일후 실제로 동독인의 수입이 상승되었고, 동·서독이 이 부분에 있어 상당히 근접해가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동독청소년의 30%이상이 그들의 경제사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통일후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다는 동·서독의 경제적 불균등에 대한 불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③ 동·서독 교류와 독일통일

통일전 동독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쉽게 변화할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자유와 개인생활의 자유를 열망했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이 이렇듯 정치적, 개인적 자유를 추구했던 요인은, 분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달리 끊임없이 지속되온 동·서독간의 교류 때문이 아니었나 짐작해 볼 수 있다.

70년대와 80년대 동서독 시민들은 각기 다른지역의 친지와 서신교환 및 방문등 교류를 갖고 있었다. 독일 청소년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독시민의 60%이상이 서독에 친지를 두고 있었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서독의 친지와 서신연락 및 방문등 개인적인 접촉을 하고있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교류이외에도 동독시민들은 라디오나 TV등 방송매체를 통해 서독사회와 항상 접촉할 수 있었는데, 서독 방송망을 통해 여러 가지 정치적 정보가 동독에 유입되었다.

1987년~1988년 라이프찌히 청소년연구소는 8-10학년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중매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동독의 청소년층 대중매체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동독방송보다는 서독방송을 선호했다. 또한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 대중매체의 이용은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태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데, 조사대상자중 통일전 정치적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써 서독방송을 심도있게 이용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일후 통일독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자주 자신을 동독시민이 아닌 연방독일시민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더 강하게 독일시민으로써의 자존심을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서독방송의 동독전파가 동독시민의 정치적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체제전환을 한층 부추였던 것이다.

④ 동독청소년의 국가관과 독일통일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동독시민의 국가관 상실은 1989년에도 계속되었다.

동독과의 연관성은 통일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독일과 동독에

대한 대립적인 사고 역시, 청소년의 의식에서 멀어져갔다. 청소년들은 동독에서 성장하여 그곳에서 생활경험과 가치관을 형성한 동독인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독일인으로 인식했다.

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독청소년의 60%이상이 전혀 거리낌 없이 자신이 독일인이라 응답했는데, 이러한 높은 국가와의 동일시 정도는 새로이 획득한 자신의 위치와 생활의 기회를 확고히 하려는 의지에서 생겨나며, 또한 수많은 불확실성의 경험, 익숙했던 생활환경의 상실 및 근대화 과정의 마찰등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⑤ 국수주의와 외국인 적대감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국가의 통일은 독일역사의 분열을 종식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또다른 분열을 의미할수도 있다. 통일을 통해 40년간 분단되었던 국가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이것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즉 서독 민주주의 체제로의 병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환기의 혼란상황에 사회로부터 소외되었거나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등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심리적으로 결핍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민족주의 혹은 국가우월주의의 이념을 통해 지나치게 주체적이고 왜곡되게 행동하려한다. 이는 대부분 다른국가를 격하시키는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국민들에겐 그들의 역사적 배경으로 불 대 국가감정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동독청소년들의 외국인 적대감정의 정도는 서독보다 훨씬 높으며, 반대로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은 상대적으로 낮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외국인적대감은 인종적인 우월감에서 연유한 것 이라기보다는 상황적인 것이거나 혹은 새로이 형성된것 이라는 논의가 한 연구결과 입증되었다. 예를들어 독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은 독일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설득력이 없는데 반해, 일자리에 대한 독일인과 외국인의 경쟁에 관해 논의되어지면 외국인 추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가속화된다. 이것은 동서독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동독의 경우가 외국인에 대해 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며 통일로 인해 악화된

일자리 문제에 더 날카롭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⑥ 세대별 국가의식의 변화

국가우월주의는 독일, 유럽국가들 막론하고 젊은세대 보다는 기성세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국가관에 대한 세대적인 관점의 차이는 다른 유럽국가들 보다 독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전쟁 전 세대(1924-1944년생)와 저항운동 세대(1945년 이후 출생자)사이에는 국가관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쟁전의 기성세대가 전쟁후 젊은세대보다 훨씬 더 국가우월적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의식의 변화는 생활주기의 변화와 연령의 영향이 모두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젊은세대에선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국수주의적, 사회주의적 과거를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적인 공동체, 국제화된 세계를 이루려는 젊은세대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통일독일의 경우 다른국가와는 달리 동·서독 청소년의 국가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이로인해 동·서독 청소년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을뿐 아니라, 이러한 이념적인 양극화 현상은 민주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어렵게 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 정치적 참여권 및 물질적인 풍요를 주요골자로 하는 수행력있는 민주주의 체제는 반 국수주의의 확산에 기여하게 되지만, 반대로 정치분야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발전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치에 등을 돌리게 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독의 경우와 서독의 소외된 계층- 중앙 민주정치로부터 이탈하여 주변세력에 관심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 동독청소년의 극우적 단체활동은 실제적으로 호기심에 의해, 혹은 반 체제감정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민주정치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감의 결여상태에서는, 그러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많다.

2) 통일독일의 청소년육성

① 통일정부의 동독지역 지원 정책

통일후 독일정부는 기본법따른 모든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썼다. 동·서 지역간의 사회문화적 격차를 줄이기위해 통일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동독에 대한 실제적 지원은 “Fonds Deutsche Einheit” (독일통일 기금),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동독발전공동체), “Kommunale Investitionspauschale” (지방투자 기금)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가 수행한 동독지역 지원정책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아동과 청소년후원사업(예를들어 탁아시설과 특히 문제상황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사회사업 분야 및 청소년 여가시설제공 분야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근로촉진법 제 249조에 의한 동독인의 근로보장에 따라 실업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며 아울러 동독지역의 민간 아동- 및 청소년후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구축한다.

- 여성청소년부의 1991년 연방청소년 계획에 따라, 민간 청소년후원단체가 동독지역의 청소년후원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부가적으로 47 Mio. DM (약 263억 원)을 예치해 둔다.

한편 1991년 동서독 청소년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인 “Sommer der Begegnung” (만남의 여름)을 위해 20 Mio. DM (약 112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 외에도 민간 아동 및 청소년후원 단체의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AFT-Programm)과 폭력근절 프로그램을 근거로 1992년에서 1994년까지 각각 90 Mio. DM 과 60 Mio. DM 이 확보됐다. 이러한 각종 진흥프로그램은 통일조약 제 32조에 따른 민간 복지증진과 청소년후원체계의 확립에 기여하게 되었다.

② 독일의 청소년정책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문제상황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인지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목표를 두고, 1991년 이래 동독지역 청소년사업에 청소년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1) 연방 아동 및 청소년계획

청소년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는 1993년 12월 20일 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계획에 관한 지침에 마련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계획은 27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 및 공공·민간 청소년후원 단체를 주 목적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독일에 살고있는 외국인 및 외국인 자녀도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근거안에서 청소년과 청소년후원 단체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동·서독청소년의 공동성장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여 수행력있는 연방차원의 민간 청소년후원 단체 (예:청소년연합, 청소년사회사업, 청소년문화사업 등)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고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중요시하여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1993년 정부의 청소년계획 기본방침에 따른 총예산은 218,778,000 DM (약 1,225억 원)이다.

(2) 연방 청소년육성

연방차원의 청소년육성은 주로 여성청소년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연방청소년부가 수행한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동독지역 민간 청소년후원단체 확립사업 (AFT-Programm)

아동 및 청소년복지법 (KJHG) 제1조 83항 1절과 통일조약 제 32조에 따라 정부는 연방청소년계획을 보완하여 동독지역에 필요한 특별 청소년

년정책사업을 수행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1992년 50 Mio. DM (280억 원)을 책정했는데, 그해 수립된 중점 수행과제는,

1. 민간 청소년후원단체 구성, 특히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사회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AFT 1)
2. 민간 청소년후원단체를 구성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 (AFT 2)
3. 사업 수행자에 대한 장려, 능력향상 및 현직교육실시 (AFT 3)

정부는 이 AFT-Programm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사업은 수행력있는 청소년후원 사업의 확립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로 인해 1992년 말 독일의 연방의회에서 원칙적으로 1992으로 제한되었던 AFT-Programm중 제 2 Programm과 제 3 Programm에 해당하는 상담과 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1993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결정했다.

나. 청소년폭력 근절사업

이미 1991년 여름부터 연방 여성청소년성은 동독지역과 베르린의 청소년의원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패싸움, 외국인 및 소수약자에 대한 난동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 및 폭력근절사업” (Aktionsprogramm gegen Aggression und Gewalt: AgAG)을 벌이기 시작했다.

1992년~1994년까지 실시된 이 폭력근절사업엔 매년 20 Mio. DM (약 11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선택된 30개 지역에서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사업, 문화적·교육적 내용을 갖춘 여가시설형성, 거리사회사업, 동아리사업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조직적 근거, 전문적 보조 및 재정적인 지원의 틀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폭력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 개인의 문제를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 조정능력을 길러주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또다른 경험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 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각 지역에는 사회교육분야에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요원

이 위임되었는데, 이를 통해 전 사업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었고, 전문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었다.

다. 정보-, 상담-, 보습교육을 통한 청소년후원사업(IBFJ-Programm)
여성청소년부로부터 지원되는 이 사업은 모든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후원사업 수행자들에 대한 보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보, 상담, 보습교육을 질적으로 향상하여 청소년후원사업의 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1990년 10월 15일 IBFJ 사업이 시작됐다. 1993년 6월까지 청소년후원사업중 32개 부분분야에 287개 세미나가 제공되었는데, 공공 혹은 민간 청소년후원사업에 관계된 4,800명의 담당자가 이 IBFJ사업에서 제공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세미나 발표는 주로 서독 청소년청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동독지역 공공 청소년후원사업의 전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동독지역 청소년청 직원의 60% 이상이 정기적으로 IBFJ사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여성청소년부 이외에 타부서에서 수행한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에는 노동사회부와 노동청의 아동 및 청소년후원사업을 위한 일자리마련정책, 노동사회부의 청소년취업생활입문 지원정책, 내무부의 청소년사회문화시설 확충사업, 경제협력개발부와 외무부의 학생 및 중소기업근로자의 개발도상국체류지원등이 있다.

(3) 지방 청소년육성

연방차원의 청소년육성은 주로 여성청소년부가 주도하는 동독지역 청소년후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독지역 민간 청소년후원사업의 확립과 동·서독청소년들의 공동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1990년 이래 연방청소년계획에 따른 모든 사업중 특히 동독지역 청소년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했던 것이다. 연방 청소년육성을 토대로 독일의 13개 지방에서도 지방차원의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각 지방별로 중점지원분야를 달리하는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역별 특색이 나타나고 있다.

③ 독일의 청소년사업

연방 및 지방청소년육성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청소년사업중 통일후 독일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사업, 취업에 입문하는데 있어 개인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취업관련 청소년후원사업 및 청소년후원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관련 시설 등을 살펴보았다.

(1) 여성 청소년사업

여성청소년부의 청소년계획에는 여자 청소년과 젊은여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여자 청소년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1993년 약 5 Mio. DM (약 28억 원)에 달했다.

여성청소년부 지원사업인 ‘기술산업분야에의 여성진출’프로그램은 여성실업률이 높은 기술분야에 여성들로 하여금 직업소명의식을 갖게 하여 직업교육의 기회와 취업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여성청소년부는 또한 1992년 7월부터 3년간에 걸쳐 스포츠 교육사업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여자 청소년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스포츠, 운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성공했다.

여성청소년부 이외에 가족노인부도 여자 청소년을 위한 특별대안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예를들어 “불우한 처지에 있는 어린나이의 엄마와 그 자녀에 대한 원조 - 교육 및 지원” 실습모형은 청소년사회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슈트트가르트에서 수행되었다. 이 사업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젊은 임신부와 엄마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교육능력을 키워주고, 일자리 근처에 탁아소 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의 실제적 원조를 통해 이 사업의 목적은 실현될 수 있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성폭력과 성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범사업

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었는데, 특히 “근친으로부터 성적 고통을 당하는 여자 청소년”의 문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했다.

(2) 취업관련 청소년후원 사업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취업상황이었다. 학교생활을 마치고 직업교육 혹은 취업에 입문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보통의 사회적 조건하에서도 헤쳐가기 어려운 이 과정은 커다란 사회적 변화로 인한 경제적 불황하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독일 청소년연구소(뮌헨)의 분소인 라이프찌히 청소년연구소는 청소년후원사업중 “취업중심적 청소년사회사업”을 수행했는데, 이 사업은 취업전선에 입문하는데 있어 개인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도와 취업생활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취업중심적 청소년사회사업”은, 동독의 상황을 고려한 취업분야에 역점을 두고 수행하고 있다. 다시말해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직교육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주거지역에도 관심을 갖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취업대안의 범주내에서 자신의 주거공간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3) 독일 청소년사업 시설

청소년후원은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아동 및 청소년보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보충교육, 탁아보조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과 행정체계 및 충분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넓은 의미의 청소년후원사업 관련 시설(혹은 기관)에는 청소년후원관련 사무국, 민간단체 사무소, 그리고 청소년후원단체협의회등이 있다. 1991년 말 옛 동독지역에는 20,843개 청소년후원 관련 기관과 203,081 실무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옛 서독지역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숫자적 측면에서 앞서있다. 서독지역에는 -동독에 비해 약 4배 많은 인구와 3,4배 많은

아동 및 청소년인구- 1990년 말 54,120개 기관과 333,888명의 실무자가 있었는데, 달리 표현하면 1990년 말 서독에는 인구 100,000명당 85개 기관과 524명의 실무자, 1991년말 옛 동독지역엔 132개 기관과 1,286명의 실무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옛 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후원사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독지역에는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아주 소규모로 확산되어 있다. 1991년말 동독지역에는 단지 66개의 민간단체 사무국, 협의회 등이 있었던 반면, 서독에는 그것의 25배에 해당하는 1,649개가 있어 동독지역의 민간단체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무국, 협의회 등을 제외한 순수 청소년후원 관련 기관에도 국공립 기관의 양적우위는 여전히 나타나는데, 전체 20,541기관중 민간기관은 단지 1,161개로 94,3%가 국공립기관이다. 민간 청소년후원 관련 시설 및 기관중 탁아시설 부문은 특히 침체되어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탁아시설은 단지 4,5% (전체 19,127중 국공립 18,260, 사립 867)에 불과하다.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중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부문은 상담기관과 청소년사업 관련 기관으로 각각 41,4%와 24,7%를 차지한다. 이와는 달리 서독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순수 청소년후원 관련 기관은 70% (전체 51,715기관중 36,339기관)정도이고, 각개 분야에 따라 70%를 훨씬 넘는 기관도 있다.

2. 제 언

1988년 까지만해도 세계의 어느누구도 독일통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동·서독의 갑작스런 통합은 우리에게 부러움과 동시에 경이로움으로 다가왔으며 누구나 한 번쯤 남북통일을 생각해 볼 정도로 통일에 대한 기대는 고조되고 있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된 만큼 예견하지 못한

문제들도 속속 발생하고 있는 독일 통일현장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통일에 대비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위의 조사결과 요약을 토대로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을 촉진시킬수 있는 대안, 남북한 통일시 나타나는 문제들에 좀더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명확한 통일개념의 정립

분단된 두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겠다. 일상적으로 거론되는 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일의 현실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1차적인 근본과제가 된다.

지리적인 분단으로 인한 휴전선의 고착, 정치적·이념적인 대립, 경제·사회·문화전반에 걸친 이질화의 심화가 민족적 단절을 초래했다는 남북 분단의 역사적배경을 고찰한다면, 통일은 곧 분단의 해소과정으로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을 물리적인 장벽을 없애는 지리적인 통합이나 이념적·정치적 대결의 해소로 보는 시각은 현실적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이 독일통합과정에서 드러났다. 통일은 언어는 물론이고 고도의 문화적, 인종적, 역사적 동질성을 보유한 한민족 재결합의 실현과정이라는 인식하에 진정한 의미의 민족재통합을 이룰수 있고,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통일과 분단극복을 이해한다면,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집단이주, 대이동이나 동·서독청소년의 대립, 갈등과 같은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는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민족공동체의식의 형성과 가치관 통합

민족통합이란 차원에서의 분단해소 과정을 통일로 개념정의 한다면 남북한 통일은 단순한 정치·경제·사회체제간의 통합만이 아닌 남북한 주민들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통합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에 따른 이질화된 문화적 지표를 극복하고 요컨대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심성의 통합이 이룩된 민족공동체속에서의 삶에 대비한다면, 통일계승세대로서 통일을 촉진함은 물론 정신적인 이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일후의 문제들에도 좀더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갈수 있으리라 본다.

3) 통일교육의 재정비

통일을 위한 준비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심화된 남북한 이질화 상태를 극복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통일교육이란 청소년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하여 통일을 촉진시키고, 통일이후의 삶에 대비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상호간의 적대의식과 불신감을 조장하고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차원에 머물렀다는 것이 각계분야의 지적이다.

그러므로 통일계승세대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될 청소년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립·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함양시키는데 통일교육의 중점을 둌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책임있는 미래지

향적인 민주시민으로써 한민족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게 함은 물론, 통일후 동태적인 생활환경의 변화를 탄력있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교육적 노력, 북한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겠다.

4) 장기적 준비과정

통일에 대한 성급한 외형적인 집착에서 탈피하여 차분한 마음으로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통일의 당위성을 생각한다면, 위에서 언급한데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준비없는 갑작스런 통일로 인해 많은 후유증을 동반한 독일 통일현장은 반세기 동안 분단되어 다른체제속에서 살아온 남북한의 통일방법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더우기 국토와 정치적인 분단뿐 만 아니라 동족상잔의 결과 민족분단까지 경험하는등 그 성격이나 분단과정이 특수한 남북한의 실정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심리적인 골을 해소시켜 같은 민족으로서 공통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분하고 장기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5) 남북교류를 통한 북한 청소년의 의식변화

본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동독청소년들이 서독에 관심을 갖게 된 주된 요인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자유로운 생활을 획득하려는 희망, 즉 그들 가치관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최근들어 해외공민들에 의한 대외생활정보, 구 동구권 국가들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일련의 정보유입, 남한 언론매체에 의한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생활 등의 정보유입을 통해 북한 청소년들의 사상의식은 크게 변화되었고, 북한당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되어 반복성향이 매우 강하게 잠재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풍족한 삶에 대한 갈망은 한층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동독시민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가치관변화가 독일통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감안할 때, 남북한 청소년이 직접 접촉하고 체험하는 교류활동을 통해 북한청소년 의식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활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통일에 대비함은 물론,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인식하던 남한과 남한청소년들을 몸소 느끼게 되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회복과 민족공동체意識의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6) 수행력있는 정치능력의 함양

20세기의 마지막기적이라 할 만큼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낸 독일통일과 통일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혼란 및 제반 청소년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일정부가 추진한 각종 경제 부흥정책 및 청소년육성정책, 동독지역 지원정책 등을 감안할 때, 통일시대에 요구되는 정치력은 통일을 이루어내고 그 이후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내는 수행력있는 정치능력이다.

통일논의의 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끌려고 하면 남북통일은 한층 멀어질 것이다. 통일은 자존심만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힘겨루기를 하는것도 아니다.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통일을 이뤄내고 그것이 다시 분열하지 않게 안팎을 재정비하는 넉넉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독일통일의 후유증으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지만, 동시에

통일후의 문제상황극복을 위한 독일정부의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Betram, Barbara u. a. 1994 : Gelungener Start - unsichere Zukunft?,
Ergebnisse der Leipziger Längsschnitt-Studie 2, DJI Verlag
Deutsches Jugendinstitut
- Bien, Walter u.a. 1994 : Cool bleiben - erwachsen werden im Osten,
Ergebnisse der Leibziger Längsschnitt-Studie 1, DJI Verlag
Deutsches Jugendinstitut
- Bütow, Birgit 1995 : Jugend im politischen Umbruch, in
Hoffmann-Lange, Ursula, "Jugend und Demokratie in
Deutschlan", Opladen
-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and Jugend 1994 : Situation der Jugend
in Deutschland, Bonn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1994 :
Neunter Jugendbericht, Bonn
- Deutsches Jugendinstitut 1995 : Sozialreport 1995, Sonderheft 2
Jugendlich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EMMAG (Hrsg.) 1993 : Leben '92. Daten und Feldbericht. Unveröffentlichter
Forschungsbericht der Empirisch-Methodischen Arbeitsgruppe am
SFZ e.V. Berlin

Friedrich, Walter u.a. 1994 : Jugendlich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Veen, Hans-Joachim u.a., "Eine Jugend in Deutschland",
Opladen

Gabriel, G 1996 : Wissenschaftliche Begleitung des Bundesjugendplan
-Modellprogramms "Arbeitsweltbezogenen Jugendsozialarbeit",
Referat auf dem Parlamentarischen Abend des DJI am 6. Juni 1996
in Dresden

Herdegen, Gerhard 1987 : Einteilung der Deutschen (West) zur
nationalen Identität, in Berg-Schlosser, Ditt(Hrsg.)
"Politische Kultur in Deutschland",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Hoffmann-Lange, Ursula 1992 : Politische Zufriedenheit und die
Legitimität des politischen Systems, in Deutsches
Jugendinstitut,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n
Einheit", Opladen

Imhof, Kurt 1993 : Nationalismus, Nationalstaat und Minderheiten.
Zu einer Soziologie der Minoritäten, in Soziale Welt

ISI - Informationsdienst Soziale Indikatoren 1994 : Steigende
Zufriedenheit in Ost-Deutschland, sinkende Zufriedenheit in
Westdeutschland, Nr. 11

Kuhnke, Ralf 1994 : Der gesellschaftliche Umbruch und seine Folgen
für die Befindlichkeit, Identität und Verhaltensorientierung,
in Bien, Walter u.a. "Cool bleiben - Erwachsen werden im
Osten", Weinheim, Juventa

Lemke, Christiane 1991 : Die Ursachen des Umbruchs 1989,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Noelle-Neumann, Elisabeth 1987 : National Gefühl und Glück, in
Noelle-Neumann, Elisabeth u.a. "Die verletzte Nation. Über
den Versuch der Deutschen, ihren Charakter zu ändern",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Piel, Edgar 1985 : Wie deutsch sind die Deutschen?, in Die neue Ordnung
1. Jg

Schubarth, Wilfried 1992 : Einstellung zur deutschen Nation und zur
Wiedervereinigung, in Deutsches Jugendinstitut,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n Einheit", Opladen

Veen, Hans-Joachim u.a. 1994 : Jugend und Politik, in Veen,
Hans-Joachim u.a., "Eine Jugend in Deutschland", Opladen

Weste, Bettina 1995 : Nationale Identität und Nationalismus, in
Hoffmann-Lang, Ursula(Hrsg.)
"Jugend und Demokratie in Deutschland"
DJI-Jugendsurvey 1, Opladen

